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 이종무 · 이기호 · 차명제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 이종무 · 이기호 · 차명제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인 쇄 2007년 12월
발 행 2007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7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늘품 (02-2275-5326)
인 쇄 처 양동문화사

가 격 7,500원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 최대석, 이종무, 이기호, 차명제[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07-10-03)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479-432-0 93340 : ₩7500

349.1-KDC4
327.5-DDC21

CIP2007003946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 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김 국 신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책임자)	김 영 호 교수(국방대) 강 동 완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손 기 웅 선임연구위원	김 영 윤 선임연구위원 김 수 압 연구위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최 대 석 교수(이화여대)	이 종 무 소장(평화나눔센터) 이 기 호 연구교수(성공회대) 차 명 제 교수(성공회대 NGO대학원)

목 차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 이종무 · 이기호 · 차명제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념 및 구분 6
3. 연구범위 및 구성 10

II.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현황 / 12

1. 한·중·일 시민사회 및 NGO 현황에 관한 비교 12
 - 가. 한·중·일 NGO 및 시민사회적 맥락의 비교 12
 - 나. 한·중·일 NGO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비교분석 17
2. 인적 인프라 현황 22
 - 가. 이슈별 네트워크 현황 24
 - 나. NGO가 구축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38
3. 재정적 인프라 현황 44
 - 가.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46
 - 나. 민간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53
4. 제도적 인프라 현황 61
 - 가. NGO 관련 법률 현황 62
 - 나. 대학 교육기관 현황 68
 - 다. 국제기구의 교육기관 73
5. 소 결 74

III. 동북아 NGO 부문별 인프라 개선방안 / 81

1. 인적 인프라 개선방안	83
가. 평가	83
나. 개선방안	85
2. 재정적 인프라 개선방안	91
가. 평가	91
나. 개선방안	93
3. 제도적 인프라 개선방안	96
가. 평가	96
나. 개선방안	97

IV.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 105

1. 기본 방향	105
가. 동북아 지역체제의 형성을 목표	105
나.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발전을 위한 한국의 주도성 발휘	107
다. 일회성 행사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시행	109
2. 세부 추진방안	110
가. 분야별 동북아 지역체제 발전계획 수립	110
나. 동북아 지역체제 형성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113

목 차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 이종무 · 이기호 · 차명제

다. 분야별 NGO 연대기구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	116
라.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상설화 지원	117

V. 결 론 / 120

VI. 참고문헌 / 124

표 목차

<표 II-1> 주요 활동 분야별 단체 분포도	19
<표 II-2> 중국NGO의 활동분야 별 비율	20
<표 II-3> 아시아 NGO 센터 하반기 교육연수과정 강의 계획	40
<표 II-4> ALFP의 연도별 주제	44
<표 II-5> 해외봉사단 파견 세부사업별 지원액	48
<표 II-6> 2005년 8월 현재 일본해외협력봉사단의 세부 파견분야	51
<표 II-7> 2007년 여성 활동가 글로벌리더십 육성 지원사업 ..	57
<표 II-8> 대학별 NGO 대학원 현황 및 설립 목표	69
<표 II-9> 국제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들의 SWOT 모델	76
<표 III-1> 국제교류·협력 NGO들의 영역별, 주체별 분류	87

그림 목차

<그림 II-1> 한·중·일 각 국의 시민운동단체들과 중앙과 지방에서의 활동관계	22
<그림 II-2> GPPAC 프로세스	27
<그림 II-3> 한·중·일 환경정보 사이트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	33
<그림 II-4> 노틸러스의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보여주는 관계망	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탈냉전 이후 동북아에서 정치, 경제, 사회분야 모두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한·중·일 3국간의 상호 의존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어느 한 나라의 경제적 부침은 곧바로 다른 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적 의존성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밀접해진 경제적 관계가 정치, 사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견인하고 있지만, 지역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는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다.

동북아는 아직도 냉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체제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냉전시기 양자 동맹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 내 국가 간에 복잡하게 얽힌 과거 역사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해국가와 가해국가 사이에 정서적 앙금이 잔존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화해가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한·중·일 각 나라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일, 반중, 반한 캠페인이 벌어지곤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의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동북아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강하고 국가 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시민사회는 국가 간 장벽을 뛰어넘어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고 지역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¹ 하지만 이러한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와 달리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의 NGO 교류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NGO 교류협력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그렇다는 것이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성과 활동성을 갖는 동북아 NGO 네트워크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한 몇 개의 네트워크를 제외하고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활동 내용을 갖는 NGO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단위 NGO들의

¹ 최대석·이종무·김석향·김경목, “동북아 NGO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파악 및 발전의제 설정,” 황병덕 외, 『동북아 지역 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33.

국제협력 활동은 동북아라는 지역을 매개로 하지 않은 채 바로 동아시아 또는 국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소수의 NGO들에게만 활동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 동북아가 상상의 공동체로서 단일한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²

질적인 측면에서는 동북아 NGO들의 교류협력의 활동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동북아 NGO들은 이 지역에서 의미있는 행위자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의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미미하다. 물론 일본 과거사 청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동북아의 공동 의제로 만들어내고 부분적이지만 일본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긴 했다. 하지만 이것을 이끌었던 힘의 원천 중 하나가 민족주의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례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동북아 NGO 교류협력 활동은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연결망 차원에서 보면 다자간 교류협력의 경험이 매우 적고, 양자 간 교류협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NGO 교류협력은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만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 외에 환경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한·중·일 NGO가 모두 참여하는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GPPAC³ 동북아 위원회 정도가 다자간 교류협력의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

2. “지리적 사실이 지역을 정의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정의는 지역 현실을 구성하는 - 개념화 활동을 포함한 - 인간 활동의 공간적, 시간적 움직임들을 물리적인 범주들 속에다 담아 들이고자 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표현 이상일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경계와 구조는 둘 다 유동적이며 지역을 정의하는 것은 곧 역사적인 문제인 것이다.” 아리프 딜릭,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 지역 구조 창설에 있어서 현실과 표상의 문제,” 정몽길 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pp. 43-44.

3. GPPAC은 무력분쟁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무력 갈등분쟁에 대한 대처 방식을 사건이 터진 후에 대응(reaction)하는 것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prevention)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PPAC은 2002년에 유럽갈등예방센터(ECCP: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가 2005년 유엔본부에서의 국제회의를 이끌기 위해 전세계에 걸친 통합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를 15개 지역으로 나눠서 준비해 왔는데, 동북아에서는 2004년 2월에 일본 동경에서 제1차 GPPAC 동북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GPPAC 동북아위원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대만이 참여하였고, 주요 도시에 포칼 포인트(focal point)를 두어서 연락을 담당하게 하였다. 포칼 포인트는 한국의 서울,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난징, 홍콩, 일본의 도쿄, 나고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만의 타이베이에

는 정도이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자 간 교류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양자 간 교류협력이 활발한 것도 아니다. 양자 간 교류협력은 주로 한국과 일본 NGO들의 교류협력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양자 간 교류협력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NGO들이 다자간 교류협력을 하는데 있어 초기에 부딪치는 어려움은 다른 국가의 NGO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협력자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 어떤 NGO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NGO가 있는지를 모르고서야 연락할 수도 없고 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국가 단위의 하위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NGO에 연락을 하면 쉽게 다른 NGO들에게 전파된다. 하지만 동북아의 경우 각 국가별로 하위 네트워크의 발전 정도가 매우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락은 확산되지 못하고 단절되기 쉽다. 특히 중국 NGO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동북아 지역 차원의 사회적 관계망이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NGO의 네트워크는 이를 조직하는 주체들이 갖고 있는 인적 관계를 통해서 조직되고 확대된다. 각 국가의 NGO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도 기존에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공식적인 접촉은 공식적인 반응만을 내오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접촉과 함께 네트워크 조직 주체의 다양한 인적 관계를 통한 비공식적인 접촉이 함께 이뤄져야 조직이 수월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관계는 조직 주체인 NGO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 즉 NGO 내부, 학계, 전문가, 재단, 기업, 언론, 정당, 정부 등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NGO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하는데, 동북아에서 각 집단들 간의 관계가 얽기 때문에 중간 매개자를 통한 접촉이 쉽지 않다.

그나마 NGO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사회적 관계망과 연결되어도 실제로 교류협력에 나서는데 따르는 제약들이 있다. 대부분의 NGO들은 재정과 인

두었다. GPPAC 동북아위원회는 2005년 7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된 이후 활동성이 약화되었지만 지금도 느슨한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력이 모두 취약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서 교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동북아 차원에서의 NGO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NGO는 소수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 NGO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동북아 NGO 교류협력이 한·일 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북아에서 NGO 네트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 논의해야 될 의제는 크게 6가지로 정리된다.⁴

첫째는 동북아 지역 NGO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NGO 교류협력은 어떤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 기초해서 이뤄진다. 그럼으로써 그 과제는 어느 한 NGO의 과제가 아니라 공동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공동의 과제로 NGO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NGO들이 교류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 인식이 동일 지역 NGO의 공동의 정체성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는 동북아 지역 문제에 대한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동북아 NGO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정책 결과물은 매우 빈약하기 짝이 없다. 보통의 경우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와 성명서가 고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동북아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기도 하였고, GPPAC 동북아 회의에서는 동북아에서의 분쟁예방을 위한 의제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내기도 하였다. GPPAC 보고서는 동북아 NGO들이 합의하여 공동 의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의 이슈들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슈는 NGO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일 뿐이며, 이슈가 곧 정책은 아닌 것이다. NGO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정책 대안의 형성, 효과적인 정책 수단과 절차,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차원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NGO들의 비전과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외화시키지 못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공론을 형성할 수 없다.

셋째는 지방, 국가 단위 NGO의 동북아 협력활동 촉진을 들 수 있다.

4- 최대석·이종무·김석향·김경목, “동북아 NGO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파악 및 발전의제 설정,” pp. 251-256.

현재 동북아 NGO 교류협력은 소수의 NGO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를 넘어서서 NGO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NGO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벅찬 일이다. 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작을수록 NGO들의 재정은 열악하고 소수 활동가들의 헌신성에 의해서 간신히 유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파악을 하기도 어렵고, 별도의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담당자가 없으며, 일회적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하려고 해도 경비와 언어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불균형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NGO들에게 있어서 재정 문제는 숙명적인 것이다. 역사가 길고 국제적 명성을 얻은 일부의 국제 NGO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NGO가 재정의 취약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NGO를 후원하는 기부자들은 재난의 희생자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NGO 자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나 연대활동에 대해서는 기부에 소극적이다.

다섯째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형성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기구들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에 매우 적극적이다. 유엔 산하의 각 기구들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아직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일례로 일본 동경에 있는 유엔대학의 경우에는 동북아 NGO 네트워크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음에도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이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많은 부분에서 NGO 교류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비용이 드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지 않고서도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소수의 NGO만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마저도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동북아 각국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문 현실에서, 동북아 NGO들의 정보 교류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의제들이 NGO들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난망한 일이다. 아니 이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매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발전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념 및 구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프라라는 용어는 사회구조 또는 조직의 기반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줄여 쓴 것으로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시설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활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어떤 일이나 분야에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과 시설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를 비경제적인 분야에 사용할 때는 매우 명확히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도리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NGO 인프라’, ‘NGO 교류협력 인프라’, 그리고 ‘동북아 NGO 교류협력 인프라’에서 각각 사용된 인프라는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 인프라의 사전적 의미가 갖고 있는 사회구조 또는 조직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선 ‘NGO 인프라’에서 인프라는 가장 넓은 범위의 NGO 관련 사회구조 또는 기반을 지칭한다. 반면에 ‘NGO 교류협력 인프라’라고 할 때의 인프라는 ‘NGO 인프라’ 중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회구조 또는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될 것이다. NGO 활동은 교류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 정책 활동, 주창 활동 등 다양하게 있고, 각각의 활동과 관련해서 인프라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북아 NGO 교류협력 인프라’라고 한다면 앞서 용례보다도 훨씬 작은 범위를 지칭하게 된다. ‘NGO 교류협력’ 중에서도 국내에서의 교류협력이나 동북아 이외 지역과의 교류협력은 제외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교류협력에 관련된 인프라로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분석에 들어갔을 때는 상호 간의 경계들이 모호해서 이러한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NGO 교류협력을 국내 교류협력과 국제 교류협력으로 일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교류협력과 국제 교류협력은 여러모로 차이가

있는데, 국제 교류협력은 우선 실무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고, 활동 비용도 국내 교류협력보다 고비용적이며, 일상적인 사업영역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차이들에 유의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동북아의 지역적 범위에서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실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라고 할 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인프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논자들마다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지역과 관련한 인프라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것인데, 그 중에서 박영규·김수암은 통일인프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분류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통일인프라를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정신적 인프라와 물질적 인프라의 구분, 둘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인프라의 구분, 셋째, 지역을 기준으로 한 국내적 인프라와 국제적 인프라의 구분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국내적 통일인프라를 의식, 제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5가지 인프라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의식인프라는 통일인프라의 정신적 영역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여론, 문화 등이 중요 구성요소이고, 제도인프라는 통일인프라 전반의 법, 제도, 기구 등이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정치·경제·문화인프라는 각각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인프라로 설명하고 있다.⁵

한편 양문수 등은 통일인프라 중 경제분야 인프라를 인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재정금융적 인프라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의미에 대한 규정을 시도하고 있다.⁶ 그는 인적 인프라는 주체의 문제로, 제도적 인프라는 법, 규칙, 관행 등과의 관계 속에서 그 범주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 인프라는 교통·운수·통신·전력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

5. 박영규·김수암,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4-19.

6. 양문수 외,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4-6.

로, 재정금융적 인프라는 실물부분의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을 재정 및 금융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차원의 인프라 관련 연구로는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관련 연구와 동북아 협력의 인프라 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다. 배정호 등은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를 교육인프라, 문화인프라, 경제인프라, 교류인프라로 구분하고 있다.⁷ 하지만 그는 인프라를 이렇게 구분한 근거를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각각의 하위 인프라 내용에 대한 설명도 매우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서술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서 교류인프라의 경우에는 ‘해외 한민족 제전’, ‘재외 한민족 올림픽’, ‘한민족 예술제’, ‘한민족 문학제’, ‘한민족 IT기술 제전’, ‘세계한상대회’, ‘세계 상공인 대회’, ‘글로벌 한민족 경영인 대회’,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 대회’ 등의 행사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박종철 등은 지역통합의 관점에서 인프라의 범주를 경제, 안보, 정치, 문화의 네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구분이 아니라 지역협력의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프라 구분과 관련한 이상의 논의에서 시사점은 한반도 통일, 지역 등 광의의 주제와 관련한 인프라는 우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부문 영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부문 영역별로 들어가게 되면 인프라의 본래 뜻인 사회구조 또는 조직 기반과 관련한 (인적) 주체, 재정, 제도 등을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분하는 것이 적실할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적, 재정적, 제도적 인프라를 기본 구성으로 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이에 여기에서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 인프라를 인적 인프라, 재정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로 구분한다. 인프라의 구성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오히려 혼란만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인적 인프라는 국제교류협력의 주체 형성 및 연결망에 대한 것이다. NGO 들이 국제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며, 이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동북아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반과 환경이 인적 인프라인 것이다. 이러한

7- 배정호 외,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53-165.

점에서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적 인프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NGO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⁸ 동북아 NGO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통해 지방 또는 국가 수준에서 활동하는 NGO 활동가들이 국제교류협력의 주체로 성장하며, 이들 NGO들의 사회적 관계망도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동북아 지역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각 영역의 NGO들이 국제교류협력 실무자들을 위해 진행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주요한 인적 인프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⁹

재정적 인프라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을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것이다. 국가를 벗어난 교류협력 활동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이 재정적 인프라인 것이다. NGO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재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기업, 재단, 국제기구의 지원금 등 크게 네 가지인데, NGO들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관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적 인프라로 보았다.

제도적 인프라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을 용이하게 해 주는 법률, 규칙, 기구에 대한 것이다. 제도란 규칙이나 법률 등 공식적인 제약요인일 수도 있고, 규범이나 가치체계 등 비공식적인 제약요인일 수도 있으며,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극히 당연시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일 수도 있다.¹⁰ 제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정치와 경제 각 부문에서 개인들 사이

⁸-NGO 네트워크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Liebler & Ferri는 이들 중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에 기초해서 NGO 네트워크를 ① 실행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② 지식네트워크(Knowledge Networks), ③ 부문네트워크(Sectoral Networks), ④ 사회변화 또는 주창네트워크(Social Change or Advocacy Networks), ⑤ 서비스제공 네트워크(Service Delivery Networks)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Claudia Liebler and Marisa Ferri, “NGO Networks: Building Capacity in a Changing World,” pp. 16-17.
<http://www.usaid.gov/our_work/cross-cutting_programs/private_voluntary_cooperation/conf_leibler.pdf>.

⁹-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NGO 활동가의 국제협력 교육을 위한 정부 및 민간재단의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협력 실무자들을 양성하는 대학 기관도 인적 인프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모두를 인적 인프라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재정적 인프라에, 대학기관은 제도적 인프라에 포함시켰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인적 주체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성격이나 중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¹⁰-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2003), p. 7.

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적 규칙, 순응절차, 표준화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¹¹ 하지만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서 제도는 좁은 의미의 제도, 즉 공식적인 규칙이나 법률, 그리고 그에 의거한 기구에 한정해서 다룬다. 제도적 인프라에는 대학도 포함시켰는데, 법률에 의거해서 설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을 고등교육제도와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프라의 순서를 인적, 재정적, 제도적 인프라로 한 것은 인프라의 발전 과정과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각 인프라의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인프라의 형성은 NGO 교류협력의 주체가 형성되어 활동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들이 보다 나은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재정적, 제도적 인프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친다. NGO의 요구와 주체적 노력없이 재정적, 제도적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재정적, 제도적 인프라의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3.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NGO 교류협력 인프라와의 연관 속에서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선 부딪치는 문제가 동북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동북아라는 지역에 대한 개념은 다소 모호한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역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동북아에 속한 행위자(주로 주권국가)를 지칭하는 말인지 문맥이나 정황에 따라 바뀌기가 쉽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가장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동북아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타이완, 홍콩 등을 포괄하며,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면 미국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지리적 공간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NGO 교류협력에서 보면 동북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지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하면 앞서와 동일하겠지만,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고 중국이 포함되는 정도가

¹¹Peter Hall,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19.

NGO 교류협력의 동북아 범위일 것이다. 이는 동북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갖고 교류협력을 하는 NGO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북아의 범위를 가장 좁은 한·중·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동북아 NGO 교류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의 범위를 가능하면 좁혀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중국은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가 거의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1장에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발전의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념과 구분을 살펴 보았다.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는 인적 인프라, 재정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로 구분하는데, 2장에서는 각각의 인프라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인적 인프라는 이슈별 인적 교류 및 협력과 NGO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살펴봄, 재정적 인프라는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는 법률, 교육기관, 국제기구로 세분해서 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렇게 파악된 현황에 기초해서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현황과 개선방안을 고려한 것 속에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II.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현황

1. 한·중·일 시민사회 및 NGO 현황에 관한 비교

가. 한·중·일 NGO 및 시민사회적 맥락의 비교

NGO의 생성과 성장은 NGO가 처해 있는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 마련이다. 정치영역의 변화나 제도의 변화와 달리 시민사회의 변화는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며, 단절적이기보다는 연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한·중간의 국교수교가 이루어지고 1998년 한·일 간에 대중문화교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한·중·일의 시민사회가 내부적으로 동북아를 향해서 열린 구조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민사회적 맥락¹²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각 사회마다 다르지만, NGO와 관련된 시민사회적 맥락은 대체로 경제성장의 정도에 따른 중산층의 사회적 구성과 의식이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회의 변화 혹은 정치의 변화에 따라 그 시대에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 혹은 욕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이러한 연구들은 담론 분석 내지는 대중문화 분석, 또는 소비의 유형 등을 통해서 분석되곤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구성 및 대중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는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한·중·일의 NGO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한 한국과 일본이 비교적 유사한 반면, 사회주의와 공산당 일당체제로 성장한 중국의 시민사회는 크게 다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비교적 자발성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중국의 시민사회는 비교적 정부

¹² 시민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이기호,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사회운동네트워크: 1987-1996』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을 참조할 것. 여기서 시민사회적 맥락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구성의 변화, 대중들의 욕구와 기대의 변화내용, 비판적 지식인의 역할, 공론 형성구조의 변화, 비판적 담론형성의 가능성에 관한 것들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분석하고 있다.

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계몽운동과 환경운동 등은 중국정부에서도 필요로 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NGO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방해가 되는 NGO들은 형성 발전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¹³ 정부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친 시장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경제사회와의 친화력)과 농촌사회까지 깊숙이 들어가 생활세계를 조직운영하고 있는 공산당의 특성(생활세계와의 친화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NGO는 한국 및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맥락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오랫동안 군사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했다는 점, 셋째, 이러한 조건하에서 끊임없이 투쟁해 온 사회 변혁적 성격의 사회운동 조직이 전국적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시민운동은 ‘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한국 NGO의 발전과정은 서구의 경우와 크게 대별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시민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NGO의 역사도 오래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제가 제기된다고 신규 NGO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NGO들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의제가 제기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과정에서 수많은 신규 NGO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서 1996년에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되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역 NGO들이 무수히 만들어지거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이 특정 의제에 대한 NGO가 결성될 때 각 지역지부가 함께 건설되는 경우이다.¹⁴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발생 과정에서 한국 NGO는 운동의 이념과 과제를 매우 크게 공유하고 있고, 연대와 네트워크의 과정에서 신규 NGO들이

13-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지배세력은 단순히 지배세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세한 영역에서도 공산당 당원이 그 중심에 존재함으로써 반대세력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14-최대석·이중무·김석향·김경목, “동북아 NGO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파악 및 발전의제 설정,” p. 141.

생성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집중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민주화 이후 대두된 민주주의 과제를 실현하려는 매우 강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면서 국가정책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가 갖지 못하는 한국적 특성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일본의 시민사회 뿐만이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내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연대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왜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커다란 힘을 발휘하면서도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요인으로 한국 시민사회가 대단히 민족주의적(nationalism)인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시민운동은 중앙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한 편인데, 이러한 무관심 혹은 중앙 수준에서의 운동의 취약성은 1960년대 운동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60~70년대 들어 일본의 시민사회는 평화운동, 환경운동, 주민운동 등의 신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서서히 성장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195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생활정치의 공간에서 시민운동을 이끌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¹⁵ 즉, 강한 국가와 실패한 사회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전국적 수준의 중앙집중식 운동보다는 지방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운동으로 정도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본의 시민운동은 학생운동, 노동운동에서 펼쳐진 동원형 사회운동으로부터 문제의식을 가진 개개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가도 하고 탈퇴도 하는 ‘열린 시민운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때로는 중앙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모아지기도 했으나, 주로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자치 운동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¹⁶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가 부러워하는 일본의 풀뿌리 시민사회의 발전이 이뤄지게 되었다.

15- 道場親信 『占領と平和』 青土社, 2005.

16- 白井久和, 高瀬幹雄編 『民際外交の研究』 三峰書房, 1997.

그러나 일본의 시민사회는 칸막이로 분절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계몽적인 지식인이 주도한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주민 운동을 통해 운동의 리더십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풀뿌리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 생활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매몰되어 국가적인 문제나 보편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며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양한 NGO와 개인들이 지역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지역을 넘어서거나 자신들이 관여하는 분야를 넘어선 의제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을 극히 조심한다.¹⁷

따라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사회운동이 잘 안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립 분산성은 일본 NGO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이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점으로서의 의의를 새롭게 부여받고 있다. 평화나 민주주의 및 인권과 같은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NGO의 활동도 참가자들이 이를 추상적인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상의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 인식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중국의 시민사회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지도되는 대상이지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이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1978년 이후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중국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는 다원주의적인 내용들을 갖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도시와 농촌, 계급계층 사이에 커다란 사회경제적 격차를 발생시켰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모두 지도/관리하기 어렵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시민사회의 영역 중 하나가 환경 분야인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NGO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 내륙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환경 보호 활동,

17- 최대석·이중무·김석향·김경목, “동북아 NGO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파악 및 발전의제 설정,” p. 145.

18- 한영혜,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2004), pp. 114-115.

그리고 중국의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나 유럽, 북미의 국제 NGO들이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 왔고, 중국의 NGO들은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수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 NGO들에게 각종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갖게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나서게 하는 측면이 있다.¹⁹

이와 같이 중국의 시민사회는 이제 태동하고 있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도 나서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댐 건설 계획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댐 건설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는 기업소의 구조 조정으로 집단 해고될 위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지방으로 가게 되면 매우 격렬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저항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일방적인 탄압을 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협상과 중재가 이뤄지기도 한다. 아직 중국의 현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중국정부도 점점 더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억압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런데 중국 시민사회는 정치외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극히 취약할 뿐더러 매우 강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다. 단적으로 양안 문제에 대한 중국 NGO의 입장은 중국 정부와 거의 다르지 않으며 국제회의에서는 이를 공공연하게 대변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 NGO의 모습은 국가를 넘어선 시민사회의 대안을 찾고, 동북아 지역 차원의 시민사회 협력을 추동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중국 NGO는 동북아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활동에서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다.

¹⁹ 최대석·이중무·김석향·김경목, “동북아 NGO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파악 및 발전의제 설정,” pp. 147-148.

나. 한·중·일 NGO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비교분석

한·중·일 NGO 및 시민운동을 비교하기 어려운 점은 시민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정형의 속성은 차치하고서도, 활동 이념 및 내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비교수준이 유사한 1차 자료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은 물론 학자들 간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한·일 간 용어 사용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운동’이라고 하는 술어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시민’이라고 하는 주어에 중심을 둔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운동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비록 더디더라도 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참여하는 ‘과정 중심의 운동’보다는 강력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단기간에 제기된 과제를 해결하는 ‘결과 중심의 운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시민’과 ‘운동’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개혁과 정치과정의 중심에서 활동하면서 ‘시민’보다는 ‘운동’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역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일본에서는 ‘운동’보다는 ‘시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변혁 혹은 운동성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일본은 시민단체들 사이의 연대보다는 개별 단체 내에서 회원들의 소속감과 참여를 더욱 중시하며, 공동체 지향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생활에 밀착된 이슈가 시민운동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공공성과 더불어 시민적 자원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 양국의 시민운동은 생활정치를 과제로 한 시민운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시민운동과 관변운동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시민운동 역시 중국정부의 감독대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움직

이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크게 고무되기도 하고 탄압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중국공산당이 이른바 ‘폴뿌리 네트워크’를 이미 형성해 왔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당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²⁰

한국, 중국, 일본의 시민운동을 의제 수준에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문제 해결형 및 연대성 창출형 의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시민운동은 공공성 창출형 의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이에 비해 공공성 집행을 위한 활동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사회복지가 43.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가 11.1%에 달하는 등 지역주민이 밀착된 공공성 창출형 의제가 전체 시민운동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와 달리 사회복지(서비스)가 18.5%인 반면 평화, 통일, 인권 등 보편적인 주제가 25.2%로 중심을 이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및 연대성 창출을 위한 의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 및 지역자치를 위한 의제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NGO들의 주요 활동분야별 단체 분포는 아래 <표 II-1>과 같다.

²⁰ “중국은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첫째, 상당수의 중국 NGO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치적·법제도적 환경 때문에 불법적·반공개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합법적 영역과 불법적·반공개적 영역 사이에는 끊임없이 사회적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둘째, 중국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로 인해 중국 NGO는 자신의 존립을 보장받기 위해 탈정치화하면서도 막강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당-국가의 권력을 활용하기 위해 고도로 정치화된 ‘이중 정치’의 행위 전략을 취하고 있다. 셋째, 중국 NGO들은 능력있는 개인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다.” 위의 글, p. 147.

<표 II-1> 주요 활동 분야별 단체 분포도

한국			일본		
중분류	소분류	%	중분류	소분류	%
시민사회	시민사회 일반 / 여성 / 청년 / 정치·행정·법 / 인권 / 평화·통일 / 소비자	25.2	인권옹호·평화추진	인권옹호·평화추진	1.1
			남녀평등	남녀공동 참가사회 형성촉진	1.0
			자녀건강 육성	청소년 육성	4.7
사회복지	사회복지 / 건강·의료 / 자원 활동	18.5	보험·의료·복지	고령자복지 / 아동복지 / 모자복지 / 장애우지 / 기타사회복지 / 건강 / 의료	43.1
문화	문화예술 / 언론·출판 / 체육·여가	15.8	교육·문화·스포츠	스포츠 / 예술·문화 진흥	6.9
교육·학술	교육 / 학술	5.8	사회교육 추진	교육·생애학습지도 / 학술연구진흥 / 소비자 문제	4.0
환경	환경일반 / 특정지역	7.1	환경보전	자연환경보호 / 공해방지 / 리사이클	9.8
지역자치·빈민	지역자치 / 빈민	5.5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 관광진흥	11.1
국제	국제	1.1	국제협력	국제교류 / 국제협력	5.4
노동·농어민	노동 / 농어민	5.4			
종교	종교	2.7			
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 / 경제일반 / 기술 / 기타	12.5			
			지역안전운동	범죄방지 / 교통안전	1.8
			재해구조활동	재해방지 / 재해시 지원	1.1
			NPO단체 지원	시민활동 지원	0.7
			무응답		4.4
기타		0.5	기타	기타	4.8
합계		100	합계		100

출처: 시민의 신문, 『한국민간단체총람』 (서울: 시민의 신문사, 2000); 内閣府 廳國民生活局(編) 『市民活動レポート』 (東京, 2001)에서 재구성.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통계를 잡아내기 어렵지만 2003년 발표한 중국 청화대학교 NGO 센터의 당시 소장이었던 왕밍 교수 및 지야시진 교수

의 연구²¹에 의하면 중국 NGO의 활동분야별 단체 분포는 다음의 <표 II-2>와 같다.²² 이 표에서 보면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정치자문’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 NGO와 정부 간의 협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및 문화예술 활동이 각각 44.63%와 34.62%를 차지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NGO의 활동과 상당 부분 공통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의 NGO 교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2> 중국 NGO의 활동분야별 비율

활동분야	%
사회서비스	44.63
연구활동	42.51
교류협력증진	39.99
문화예술	34.62
법률지원 및 자문	24.54
정치 자문	21.88
빈곤 극복운동	20.95

다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시민운동을 생활정치 과정에서 ‘공공으로 행동하는 시민’을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점에서 비교하면, 이 문제 역시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의 상이성으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으로 행동하는 시민은 ‘변혁지향적 민’²³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참가형 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변혁지향적 민이 개혁의 과제에 관심을 쏟는다면 참가형 민은 공동의 과제에 관심

21_ 왕밍 교수와 지야시진 교수는 2003년 동경, 와세다 대학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움에서 중국의 시민사회 현황에 관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이들의 발표는 중국 시민사회를 다양한 통계들에 기초하여 설명해 준 바 있다. Jia Xijin, Wang Ming, “Civil Society and in China,” International Symposium in Waseda University, (November 21st 2003).

22_ 이들의 연구는 복수응답을 허용했기 때문에 한국, 일본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NGO의 활동경향을 이해하는데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3_ 이신행,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서울: 민음사, 1997) 참조.

을 쏟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변혁지향적 민은 19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광범위한 시민세력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1990년대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노동, 농민, 빈민 등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중추역할을 담당했던 부문운동 지부들이 지방에서 생활정치 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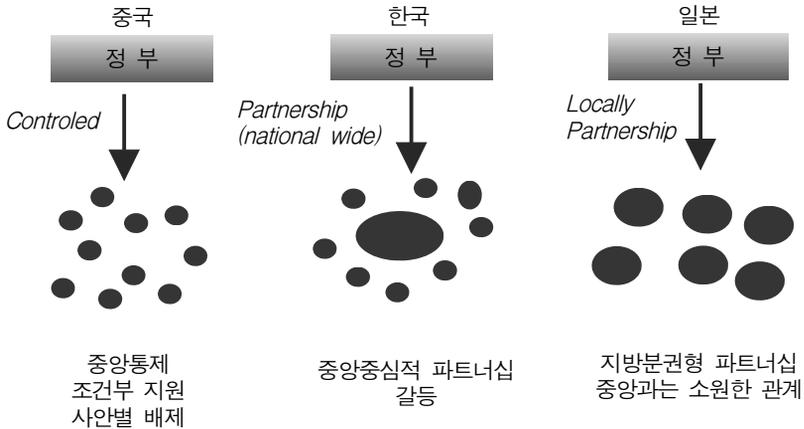
일본의 경우 참가형 민은 공공성 창출형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참가의 다양한 틀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참가형 복지를 통한 시민영역의 확장이라든지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정체성 운동 등이 참가형 민을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시민운동의 장이라고 생각된다. 참가형 민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로 최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의 협력관계 및 시민참가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변혁지향적 민의 전통과 뿌리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대부분의 운동이 관변운동의 성격이 크지만 점차 정부로부터 자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운동 또한 점차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며 이미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운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끝으로 한·일 간 의제의 성격 차이로부터 공공권의 사회적 분위기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문제 해결형 및 연대성 창출형 의제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파급효과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공공권의 성격은 때때로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 공공권은 공공재 창출형 의제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슈의 사회적 파급효과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를 공유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공공권은 한국에 비하여 덜 개방적이며 파급효과가 넓기보다는 깊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한국의 공공권이 관(官) 배제적인데 반하여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官) 협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및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민 협력관계가 공공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II-1>은 한·중·일 각 국의 시민운동단체들과 중앙과 지방에서의 활동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1> 한·중·일 각 국의 시민운동단체들과 중앙과 지방에서의 활동관계²⁴



2. 인적 인프라 현황

인적 인프라는 국제교류협력의 주체 형성 및 연결망에 대한 것이다. NGO 들이 국제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며, 이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반과 환경이 인적 인프라인 것이다.

초국적 협력을 통한 인적 인프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상호 방문하거나 교류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2000년 이후에는 일회성 교류에서 지속적인 협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동시에 한·일관계 중심으로 발전했던 양자 간 협력관계가 중국이 포함된 3자간, 나아가 대만과 몽골 및 북한 그리고 동남아가 동참하는 다자간 협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적교류를 통한 활동영역 또한 점차 ‘인프라’의 형태를 이루어가고 있다. 곧 과거에는 인맥에 의해서 활동이 좌우되었지

²⁴ 이기호·양미강·임성모, 『동북아 사회문화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발전 방안과 모델: 평화, 역사, 지식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만 공동의 일감이 자리잡아가면서 인물보다는 제도화된 프로그램이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적 인프라의 경우 협력의 사안에 따라 점차로 세분화되고 활동의 내용 및 성과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는가 하는 점과 인적 구성이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곧 인적 인프라의 형성이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하는 점이다.

‘활동’의 경우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과정을 동반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교육’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활동가, 즉 인적 자원을 재충전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곧 전자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활동가들의 교류라면 후자는 활동가들을 위한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예컨대 전문 활동가가 아닐지라도 NGO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직업 활동가로서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함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속한 이웃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동북아 프로그램의 활동가로 일하게 되기도 한다.

한편 활동가들의 교류는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상대국에 대한 지식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갖기 마련이다. 따라서 활동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휴직 혹은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위과정을 밟게 되면 활동과 공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병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부를 마치고 다시 활동에 복귀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몫이다. 아직 여기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본래의 NGO로 돌아와 일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활동’을 계기로 발생한 배움에 대한 욕구는 활동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충족될 수 있도록 ‘교육’ 체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교육’ 그 자체는 인적 인프라의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적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인적 인프라의 형성은 크게 보아 이슈 영역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들과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은 일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라고 하는 다국적 차원의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가. 이슈별 네트워크 현황

(1) 역사: 한·중·일 3국의 공동의 역사교과서 모임 ‘미래를 여는 역사’²⁵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시민, 교사, 연구자들이 공동 역사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를 출간하기로 처음 의견을 모은 것은 2002년 3월 난징에서 열린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이었다. 이 대회는 2001년에 나온 ‘새로운 역사교과서’(후소사)의 역사왜곡에 공동 대응하여 일본의 과거침략 사실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평화’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역사인식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회의였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3국의 시민단체와 교육계,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역사교재를 출간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은 단지 일본의 과거 침략사실을 왜곡 은폐하는데 있지 않다.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지니는 근본적 문제점은 축소 왜곡이 보다 노골화된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보편적 역사인식의 당위성 자체를 부인하는데 있다. 이 교과서는 역사인식의 상대성을 강조하며, 어떠한 국가든 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 국민을 위해 필요한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을 하는 것이 무방하며 필요하다는 국가 중심적 상대주의의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시민사회는 20세기에 벌어졌던 제국주의의 침략,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의 비극을 깊이 반성하고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또 다시

²⁵ 위의 책.

‘역사’를 국가주의적 국민동원의 도구로 악용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과거침략과 지배의 사실, 그로 인한 민중의 피해를 각종 사례를 제시하면서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역사왜곡에 대응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중심적 서술에서 벗어나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재구성함으로써 국가주의적 역사교육을 뛰어넘는 역사교육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었다.²⁶

공동교재 개발을 위해 2002년 3월 난징에서 한·중·일 공동교과서 편찬에 합의해서 실제로 이 편찬사업이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4년여 동안, 한·중·일 3국을 오가면서 11번에 걸친 국제회의와 40여회에 걸친 국내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3국간의 이견과 경비 조달의 어려움, 통역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가능성을 드러내게 된 것은 2002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제2회 도쿄 국제회의이다. 도쿄회의에서 처음으로 목차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시대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중·일이 제시한 목차와 시대구분에 관한 토론을 통해 3국 집필위원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5년 4월 번역에 따른 한·중·일 3국의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호 일치하는 공동교재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공동출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중·일 3국 모두에게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비판적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기술을 하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인 후소샤 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 공동교과서 편찬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식민지 전쟁에 대한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는 한·중·일 3국이 갖고 있는 연구의 차이나 관점,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논쟁거리가 수도 없이 드러났다.²⁷ 쟁점들 모두에 대해 한·중·일 3국이 완

²⁶ 김성보,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의 첫 걸음 - 미래를 여는 역사의 집필과정과 한국의 반응,” (일본 동경경제대학 심포지움 발표문, 2006년 7월).

벽하게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치열한 토론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 위에서 합의의 기초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동북아 3국의 연대활동이 직접 역사를 공동으로 서술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세 가지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첫째, 최초의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라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필하여 동시에 출판하는 최초의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로서 지난 4년간 3국의 학자, 교사,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둘째, 평화와 인권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집필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19세기 중엽 이후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동북아의 미래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3국의 시민 모두 역사의 진실과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일본의 일각에서 저지르는 역사왜곡은 설 땅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열린 시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편협한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견지하였다. 승자와 강자의 역사가 아니라 억눌렸던 여성, 소수자, 민중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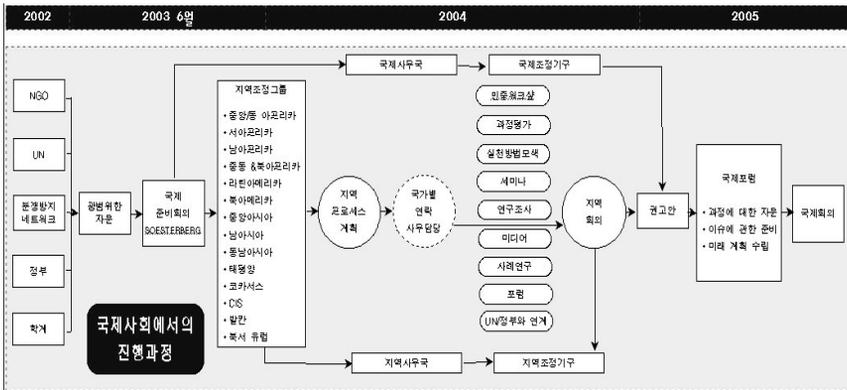
27_ 몇 가지 쟁점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항 이전 3국의 상호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의 문제, 일본의 전쟁 침략 행위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의 문제, 일본의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이다.

28_ 『미래를 여는 역사』 홍보물.

(2) 평화: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위원회²⁹

GPPAC(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은 무력분쟁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무력갈등분쟁에 대한 대처 방식을 사건이 터진 후에 대응(reaction)하는 것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prevention)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PPAC은 2002년에 유럽갈등예방센터(ECCP: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가 2005년 유엔본부에서의 국제회의를 이끌기 위해 전 세계에 걸친 통합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GPPAC은 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발전하였고, 동북아 지역대회를 포함하여 15개 지역대회에서 갈등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 행동의제를 채택하였다.³⁰ 그리고 2005년 7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GPPAC 회의에서는 ‘갈등예방을 위한 세계 행동의제’(Global Action Agenda for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래 <그림 II-2>이다.

<그림 II-2> GPPAC 프로세스



29_최대석·이종무·김석향·김경목, “동북아 NGO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파악 및 발전의제 설정,” pp. 207-212.
 30_그러나 실제로는 각 지역의 성격에 따라 지역보고서는 많이 달랐으며 대체로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니셔티브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GPPAC 동북아위원회는 2004년 2월 도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³¹ 당시 이 회의에서는 동북아의 갈등 요인으로 한반도 핵 위기, 중국-대만 해협 문제,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토 분쟁, 일본의 헌법 9조 개정 및 재무장 문제, 일본과 한국의 이라크 파병 문제,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관련된 역사 이해 및 지역 국가들 사이의 화해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간안보 문제 등을 지적했었다.

한편 2004년 4월에는 한국의 NGO들이 연대하여 GPPAC 한국위원회를 발족시켰다.³² GPPAC 한국위원회는 한국 시민단체의 갈등예방 활동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갈등 예방을 위한 ‘동북아지역 행동의제’를 만들기 위해 그 동안 한국 내 NGO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한국 정부와 주변국 정부, UN 등에 제안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GPPAC 동북아위원회는 2006년 3월 1~4일에 금강산에서 지역 내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금강산 회의에는 서울, 베이징, 홍콩, 상하이, 타이베이, 도쿄, 교토,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동북아 행동의제 이행을 위한 2006~2010 행동계획을 만들었다. 특히 동북아의 주요 현안인 한반도 핵 위기와 6자 회담, 일본 평화헌법 9조, 핵무기 없는 동북아 등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온라인 동북아 평화구축 포럼 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금강산 회의는 한반도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금강산에서 개최한 점에 큰 의미를 두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 이후 GPPAC 동북아위원회는 2007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울란바토르 회의에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대만, 캐나다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이

31-GPPAC 동북아위원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대만이 참여하였고, 주요 도시에 포칼 포인트(focal point)를 두어서 연락을 담당하게 하였다. 포칼 포인트는 한국의 서울,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난징, 홍콩, 일본의 도쿄, 나고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만의 타이베이에 두었다.

32-GPPAC 한국위원회가 발족할 당시에 참여한 국내 NGO는 다음과 같다: (사)개혁자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포럼,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한국아나뎀티스트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비폭력평화물결, 참여연대, 동북아평화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통일교육문화연구원 등.

회의의 주제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증진’이라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동북아에서의 비핵화 확산 방안과 2.13합의로 탄력을 받은 6자 회담을 시민사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었다.

GPPAC 동북아위원회는 사실상 동북아 시민사회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다자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각 국가들의 시민사회 발전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비핵화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내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동북아 시민사회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공동의 전망을 세우고 인식을 일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GPPAC 동북아위원회는 당분간 시민행동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일, 즉 평화 의제에 대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공동 정책 개발과 같은 역량 구축에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환경: APGN(Asia Pacific Green Network)

2005년 2월 교토에서 열린 APGN(Asia Pacific Green Network)은 평화와 정치참여 그리고 에코로지를 주제로 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APGN은 초록정당 혹은 초록정치를 지향하는 운동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을 초록이라는 상징적 색깔로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으로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 행동의 중심점을 만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록정당을 가진 국가와 아직 초록운동을 하는 수준의 국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며, 같은 국가 안에서도 초록정치와 초록운동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보인다. 예컨대 초록에 대한 강조점을 운동에 더 두어야 하는지 정치에 더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커다란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토모임은 향후 ‘초록’이라는 아이콘에 동의하는 정치단체 및 운동단체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냈고, 실제로 그 후속모임이 6개월 뒤인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다. 몽골에서 열린 초록 정치네트워크 모임은 일본, 대만, 한국, 몽골이 참석하였으나 본래는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중국도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모임의 취지는

동북아 초록네트워크를 구상해보는 것이었으나, 각 지역의 초록운동이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느슨한 회의형태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슈가 보다 분명하고 연대의 축이 형성이 되면 초록이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4) 답론: 계간 『아시아』잡지를 통한 활동연대

2006년에 영어와 한글이 혼용된 계간 『아시아』라는 잡지가 국내에서 발행되었는데, 이 잡지는 지난 10여년 간의 아시아 작가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교류에 힘입어 만들어졌다.³³ 아시아라는 화두가 문학인들의 공동의 화두로 자리하고 여기에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아시아’라는 영역을 개척해가고자 했던 이들의 움직임은 아시아 7개국 작가 초청 심포지움을 계기로 구체화되었다. 다음의 창간사는 문학인들의 모임이 잡지라는 매체를 잉태하기까지의 어려움과 잡지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아시아』의 창간 작업에 참여한 이들이 무엇보다 고민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어떻게 『아시아』라는 이름에 값하는 지면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아시아』를 어떻게 아시아의 창조적 상상력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정신적인 자유무역지대로 가꾸어갈 것인가.

창간작업을 맡은 것이 한국의 작가들이고, 인쇄되는 곳도 한국이지만 『아시아』의 지면은 창조적 상상력을 지닌 아시아인 모두의 것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시아』의 창간을 준비한 이들의 확고한 원칙이었다. 서남아시아에 네트워크를 가진 팔레스타인, 동남아시아에 네트워크를 가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에 네트워크를 가진 몽골 작가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18쪽)

33_아시아 작가들의 모임에 주요한 터전이 되었던 것은 1995년 구성된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임을 주도했던 소설가 방현석에 따르면 [베트남을 사랑하려는] 혹은 [베트남과 연대하는] 등의 표현 대신에 굳이 [베트남을 이해하려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사랑을 우리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랑과 연대가 어떻게 상대에게 폭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베트남전쟁을 통해서 보았고 지금의 이라크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모임의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

… 중략 … 『아시아』를 준비하면서 했던 큰 고민의 하나는 우리가 아시아의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가, 서구중심의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결론은 ‘없다’였다. 『아시아』의 역할은 아시아의 대지 위에서 출현하고 있는 창조적 상상력이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통로를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이다.(27쪽)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그 책이 발행되고 있지만, 이들의 아시아 범주는 동북아에 머물지 않고 이미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면서 서남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가치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로와 장르들이 작품을 통해서 서로 이해해나가는 가운데 만들어가야 할 창조의 영역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잡지는 2006년 여름호를 창간호로 해서 2007년 가을호까지 총 6권이 발행되었는데, 작가들이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시아를 향한 문학 적 담론을 생산해내는 것은 시민사회의 국제교류협력에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독자들의 아시아성을 감안할 때, 출판물 통해서 어떻게 독자들과 접점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5) 정보 및 의사소통: 한·중·일 환경정보 사이트(Enviroasia)와 노틸러스(Nautilus)

(가) 한·중·일 환경정보 사이트

한·중·일 환경정보 사이트는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동북아 환경 NGO들의 의사소통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의 환경운동 단체들이 그간의 교류와 활동을 바탕으로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해 분명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이다. 둘째, 한·중·일 3국이 환경문제를 서로 알리는 공동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⁴ 셋째,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34. 보통 홈페이지는 한 단체가 운영을 맡는 방식이지만 한·중·일 환경정보 사이트는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언어를 3개 국어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의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초기 화면에서

각국의 시민사회를 소개하는 활동을 겸하고 있다.³⁵ 넷째, 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하지만 동시에 2년에 한번씩 동아시아 시민환경회의를 주관한다. 다섯째, 본 사이트는 교류 이외에 계몽적 효과 곧 교육적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웹사이트 이외에도 ‘지구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각국에서 매달 1개씩 소개하고 있고, 비정기적이지만 환경교육 사례집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홈페이지에 실제로 들어가면 한국, 중국, 일본의 홈페이지가 똑같지는 않다. 중요한 사안은 서로 공유하고 있지만 각국의 정보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자국어로 쓰여진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마도 이것은 초기 한·중·일 공동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번역의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구조가 똑같고 언제나 내용을 호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한 자발적인 한·중·일 의사소통 네트워크로서는 최초의 시도로서 향후 발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 <그림 II-3>은 한·중·일 환경정보 사이트의 초기 화면이다.

언어를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이 홈페이지는 웹사이트의 자동번역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색한 표현과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 전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의 언어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5- 한국은,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정보센터, 중국은 중·일·한 환경정보 공유 자원봉사팀, 일본은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가 그 책임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1-3> 한·중·일 환경정보 사이트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



출처: <www.enviroasia.info>.

(나) 노틸러스

1992년 설립된 노틸러스는 2004년 이후 싱크탱크로서 연구 기능 및 네트워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연구 및 정보활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다.³⁶ 노틸러스가 모든 정보를 오프라인 상에서 정리하여 온라인에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 단체들이 언제든지 웹사이트에 직접 접근하여 새로운 가상의 공동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가상의 테크놀로지는 현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파트너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동아시아 시민사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틸러스 홈페이지 운영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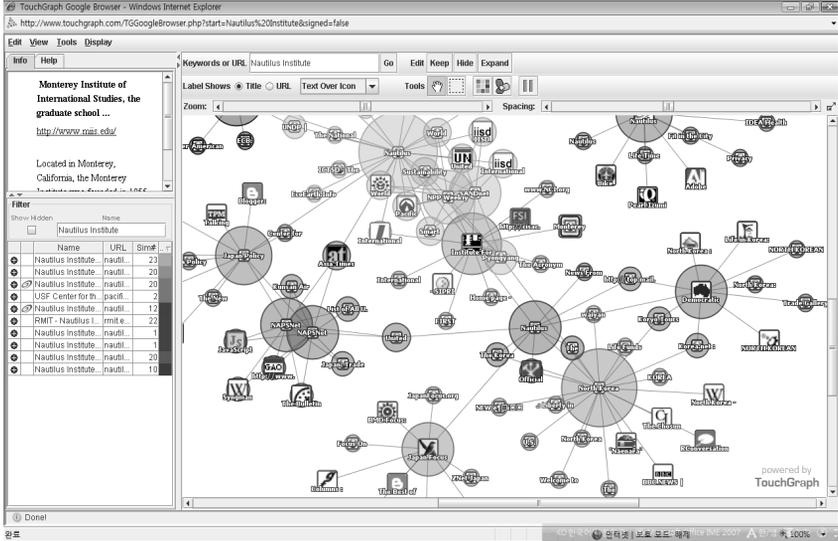
³⁶그동안 노틸러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동아시아 문제를 접근해 왔던 기존의 ‘동아시아 평화안보 네트워크(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와 ‘동아시아 학문 및 안보의 공동연구 네트워크(East Asia Science and Security Collaborative Network)’, ‘호주 평화안보 네트워크(Austral Peace and Security Network)’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올리고 관리할 수 있는 ‘가상 연구 및 혁신 연구소(Virtual Research and Innovation Institute)’의 형태로 변화시켰다.

노틸러스가 이러한 변화를 채택하게 된 것은 첫째, 인터넷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싱크탱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둘째, 지역 센터를 통해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오프라인에서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셋째, 시나리오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 활동가 등 다양한 지적 네트워크와 리더십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아래 <그림 II-4>는 노틸러스가 그동안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중 특히 ‘동아시아 평화안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³⁷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등록된 다양한 웹사이트들의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그림 II-4>에 들어가면 관계망이 살아 움직이는데, 각 노드들의 윗부분에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노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망이 열리고 있다.

37- 노틸러스의 ‘동아시아 평화안보 네트워크’는 싱크탱크, 미디어, NGO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의 어떤 단체들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II-4>는 동북아 내부의 연결망 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외부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림 11-4> 노틸러스의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보여주는 관계망



출처: <<http://www.touchgraph.com/TGGoogleBrowser.php?start=Nautilus%20Institute&signed=false>>.

(6) 여성: 생협 운동을 통한 지역여성들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여성 지역 활동가들의 운동은 각국별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각국의 생협 운동은 지역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기에 참여한 여성 활동가들은 단순한 회의체 중심의 연대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적자원의 육성에 관심을 쏟았다. 여성 활동가들은 1년에 한번 각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회의 및 현장학습을 하는 한편, 각 국가에 인턴사원을 파견하는 등 여성 중심의 동아시아 연대운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³⁸

초기에는 각국의 생협 운동을 공부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2002년부터는 한국, 일본 대만의 주부들이 매년 ‘아시아자매회의(Asia Sisterhood International Meeting)’라는 이름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이

38_ 조직의 리더십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각국 간 인턴사원을 받기로 하고 상대국에 대한 이해, 언어습득 그리고 현장학습을 통해서 아시아 연대의 일꾼을 키우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회의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지역(local)의 교육, 환경, 여성 분야의 지도력을 배출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뤄졌다.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들로 한국에서는 여성민우회, 대만은 주부연맹 생활소비합작사 그리고 일본에는 생활클럽생협이 있다.

한국에서 열렸던 2005년 회의에서는 아시아네트워크를 위한 가치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자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치와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교류의 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대안적 사회창출 등 8가지 공통원칙을 정립했다.³⁹

(7) 시민연대

(가) 한·일시민사회포럼⁴⁰

한·일시민사회포럼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동경과 서울을 번갈아 주최지역을 바꿔가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시민사회포럼’(이하 아태시민포럼)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95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NGO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20개의 아시아 NGO 대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약 90여명이 4박 5일 동안 아태지역 시민운동의 현황과 경험들을 공유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NGO 활동가들의 국제적인 교류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그 후 1997년 방글라데시에서 제2회 아태시민포럼이 개최되었다.⁴¹

그러나 광범위한 아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의의 성과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인식 하에서 소지역(Sub regional) 마다의 모임을 발전시켜 구체적인 의제들을 다루기로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 그런데 소지역별 회의도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부진하여 성과없이 5년 이상이 흐르면서, 2002년에 더 지역적으로 좁혀서 한국과 일본에 국한하여 새롭게 출발한 것이 한·일시

39- <http://blog.naver.com/kwgs21?Redirect=Log&logNo=100019490494>에서 인용.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이에 대한 보고서는 여성민우회(<http://www.minwoocoop.or.kr>) 자료실에서 볼 수 있음.

40- 최대석·이종무·김석향·김경묵, “동북아 NGO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파악 및 발전의제 설정,” p. 174.

41-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시민입법기구, 『제1회 한·일시민사회포럼: 테러 사태 이후의 동북아의 평화와 한·일시민사회의 역할』 (한·일시민사회포럼 자료집, 2002), p. 7.

민사회포럼인 것이다. 한·일시민사회포럼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5회가 개최되었는데, 한국의 아시아시민사회연구원과 일본의 시민입법기구가 공동으로 사무국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한·일시민사회포럼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식네트워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2005년의 3회 포럼부터 중국의 NGO 연구자도 발표자로 참여시키고 있다. 아직 중국의 NGO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NGO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겠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한·중·일 시민연대 프로그램⁴²

평화포럼의 한·중·일 시민연대 프로그램은 한·중·일의 시민활동가 연대와 육성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다. 기본 방향은 한·중·일 간에 놓여있는 여러 장벽을 젊은 활동가들의 장기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뛰어 넘어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자간 교류프로그램을 하기보다 양자 간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취지로 적어도 3년간 한·일 양국이 스터디 투어를 하면서 현장경험과 워크숍을 하기로 하였다.

대체로 이 프로그램은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에 상대국을 방문하여 일주일 가운데 나흘은 스터디투어로 이들은 워크숍으로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두었는데 그 한 가지는 지방에서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 생활공동체의 실험을 체험해보자는 것이었다. 작은 지역에서 아시아가 싹틀 수 있는가 하는 호기심과 기대가 깔렸던 것이다. 또 다른 원칙은 3, 40대가 중심이 되어 있는 현재의 양국 참가자들이 미래를 생각하여 20대와 함께할 수 있도록 후배와 친구들을 찾아내어 언제나 30% 정도는 새로운 활동가로 구성하는 것이다.

2006년에 3년이 지나면서 일본과 한국은 각자 중국과 양자관계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

⁴² 본 내용은 다음의 글에서 인용하여 조금 수정한 것이다. 이기호, “아시아 활동연대 체험기,” 서남포럼, 『2006 동아시아 연대 운동단체 백서』 (서울: 아르케, 2006).

단체를 매개로 운남성 지역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지역 활동가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현재 평화포럼은 2007년 이후 해체되면서 사실상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이다.

(다) 동아시아 평화포럼

2006년 10월 8~9일에 동경에서 열린 동아시아 평화포럼에서는 활동가, 지식인, 정치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는 동아시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⁴³을 벌였다. 이 모임은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아 이와나미 서점과 크리스찬아카데미(현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했던 ‘해방 50년, 패전 50년’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을 10년 만에 다시 개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⁴

2006년에는 사단법인 평화포럼이 한국 측에서는 주관을 하였고 일본 측에서는 이와나미 서점의 세카이 편집부, 피스보트, 그리고 니와노 평화재단이 공동으로 일본 측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모임을 준비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기존의 지식인과 달리 지식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현장으로부터의 지식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지식활동가’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현재 동아시아 평화포럼은 2년에 한 번씩 동아시아 지식인, 활동가, 언론인,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해나가기로 하고 2008년은 중국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나. NGO가 구축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1) 아시아 NGO 센터⁴⁵

아시아 NGO 센터는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십시일반 출자하여 만든 공동의 아시아 시민사회 육성기관이다. 2003년에 시작된 아시아 NGO 센터의 설립 배경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⁴⁶

43- <http://www.donga.com/fbin/output?f=vv_&n=200610110111>.

44- 1995년에 이 모임을 주관했던 한국의 강원용 목사와 이와나미 서점의 사장 야스 에로스케씨는 모두 고인이 되었지만 여기에 함께 했던 이들이 한·일관계를 한·중·일로 넓혀 동아시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한 것이다.

45- <<http://www.asiangocenter.net>>.

46- <<http://www.asiangocenter.net/infor.php>>.

‘…한국은 이제 OECD그룹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제규모로는 세계 12위로 국제적으로는 그 역할이 증대되기를 요청받고 있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 눈을 돌려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이미 많은 교류들이 있어왔지만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공동사업수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교류나 인적교류, 일회적인 공동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많은 서구의 시민사회가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그 역할을 증대시켜 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센터는 몇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아시아 지역과 일상적이고도 체계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주요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지역과 공동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언어나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연수,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민사회운동의 영역을 다양화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를 훈련시키는 것은 지금의 한국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 NGO 센터는 이미 단기 연수과정 및 장기 연수과정을 통하여 주로 한국의 활동가를 교육하고 있다. 필리핀이라는 현장에서 아시아를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의 사회운동을 돌아보고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연수의 경우에는 영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어학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강사의 경우에는 한국인 강사와 필리핀 강사로 나누어지며 현장학습을 겸하고 있다. 2005년까지 약 200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2007년까지의 통계를 합하면 250명 내외가 이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연수에 참여하는 이들이 대체로 10명 남짓임을 감안하면 장기연수를 거쳐 간 사람 수도 1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단기연수에 참여했던 사람의 수를 합하면 수백 명이 지난 5년간 아시아 NGO 센터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 NGO 센터는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단체가 스스로 지향하는 바대로 첫째, 한국 시민사회 활동을 아시아 시민사회 및 언론에 소개함과 동시에 각 나라의 주요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활동가 양성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활동

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활동과 아시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보공유와 교육활동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주창활동을 전개한다. 이 세 가지 목표가 모두 균형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보공유와 교육활동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표 II-3>은 올해 진행하고 있는 10기 과정생의 프로그램이다.

<표 II-3> 아시아 NGO 센터 하반기 교육연수과정 강의 계획

Asian NGOs Center 하반기 교육 연수과정			
#입문과정 목표: 교육과정 안내와 필리핀 문화, 정치, 사회의 전반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한 현지 적응 및 원활한 연수계획 수행을 돕는다.			
#심화과정 목표: 전 교육 과정을 통해 연수 참가자들의 각 부문별 국제 연대의 방향 및 연대의 틀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의 도약적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다.			
	내용	교육목표	진행 및 방법
도 입	Orientation 및 입학식	프로그램 이해	
	[개강 1] 연수 전망과 기대 그리고 다짐	개인활동 및 전망 나누기	워크숍
	[현장] 도시빈민지역 - 바세코	빈곤문제의 현실 이해	현장방문
	[개강 2] 필리핀의 사회, 문화, 정치	필리핀 사회의 이해	강의
입문 과정	필리핀 사회운동 - 개괄	필리핀 사회운동 개괄	강의
	필리핀 사회운동 - CO운동	지역공동체운동 이해	강의
	연수생 자체 심화 모임	연수생간 토의 / 영상자료시청	토의
	필리핀 사회운동 - 여성부문	필리핀 여성운동이해	강의
	[현장] 주민조직의 사례	지역공동체운동 이해	현장방문
	필리핀 사회운동 - 농민운동	필리핀 농민운동의 이해	단체방문
	필리핀 사회운동 - 환경부문	필리핀 환경운동이해	강의
	연수생 자체 심화 모임	연수생간 토의 / 영상자료시청	토의
	[현장] 환경문제지역 - 파식강	환경문제의 현실 이해	현장방문
	필리핀 사회운동 - 평화 및 인권부문	필리핀 분쟁 및 평화문제	강의
	필리핀 사회운동 - 대중교육	대중교육방법 이해	강의

	BAYAN에 대하여	필리핀 NGO활동과 형태 이해	단체방문	
	연수생 자체 심화 모임	연수생간 토의 / 영상자료시청	토의	
	CODE NGO에 대하여	필리핀 NGO활동과 형태 이해	단체방문	
	AKBAYAN에 대하여	필리핀 NGO활동과 형태 이해	단체방문	
	Membership Training 1	정리와 재충전(2박 3일)		
심화 과정	[세계화1] 세계화와 시민사회 대응	세계화 문제	강의	
	[세계화2] 협동조합 운동	대안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운동 이해	강의	
	[아시아1]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의 이주노동자 현실 이해	강의	
	연수생 자체 심화 모임	연수생간 토의 / 영상자료시청		
	[아시아2] 한국기업의 아시아 노동자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 이해	단체방문	
	[국제펀드-1] 국제펀드의 경향	국제 주요 Donor Agency 소개	강의	
	[국제펀드-2] 국제펀드 응모방법	프로젝트 작성 및 응모방법	강의	
	[국제펀드-3] 프로젝트 만들기 및 응모	팀별 실제 프로젝트 작성 및 신청	워크숍	
	[국제펀드-4] 프로젝트 심사	응모 프로젝트 심사 및 선정	워크숍	
	개인별 연수과제 및 연수단체 정하기	연수과제 및 활동단체 초안논의	워크숍	
	단체활동 안내 및 연수주제 논의	연수과제 논의 및 단체활동 방법 안내		
	[아시아3] 아시아국가별 조사 발표 1	아시아국가별 이해	보고 및 종합	
	[아시아4] 아시아국가별 조사 발표 2	아시아국가별 이해	보고 및 종합	
	단체활동 중간 보고 1			
	[특강 1] 필리핀정부의 빈곤극복 정책	빈곤극복을 위한 정부, NGO 협력 관계 이해	단체방문	
	단체활동 중간 보고 2			
	[특강 2] CO운동의 경험	CO운동의 현장 경험담	강의	
	단체활동 중간 보고 3			
	[특강 3] Philcos 소개	주민조직가들을 위한 단체 소개	강의	
[특강 4] 미군기지 독극물 피해	수빅, 클락 전 미군기지 독극물 피해 지역 및 피해자 방문	현장방문		

	[특강 5] 미군기지 성매매 문제	미군기지로 인한 성매매문제 이해	단체방문
	단체활동 최종보고 및 프로그램 평가		
총정리	총평가회 및 보고서 제출		
	수료식		
	졸업 여행		

(2) 아시아교육연구원

아시아교육연구원은 아시아 시민 육성을 목표로 설립한 교육중심의 NGO이다. 이 조직은 주창활동 중심의 NGO가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07년에 교육부 산하 법인으로 등록되어 이제 갓 시작하였지만, 아시아교육연구원을 출범시킨 주역들은 오랫동안 아시아 시민운동에 관계해 왔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조직의 역사는 짧지만 활동의 역사는 지난 수십 년간의 아시아 시민운동의 궤적을 반영하고 있다.

아시아교육연구원의 첫번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2007년 8월에 캄보디아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자는 대부분 한국 시민운동 단체의 활동가들이며, 약 3주간에 걸쳐 프놈펜과 앙코르와트를 직접 방문해 현지 시민단체들과 교류하고 홈스테이 등을 통해 캄보디아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아직 보고서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이후 캄보디아와의 지속적인 연대와 교류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의 교육사업과 다른 지역의 아시아 국가와 연대해 가는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국제문화회관⁴⁷

일본의 국제문화회관이 주관하는 아시아 지도자 펠로우십 프로그램(ALFP: Asia Leadership Fellow Program)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해왔다. ALFP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40대 혹은 50대의 중견 전문가를 초청하여 두 달 간 함께 숙식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적 교류를 한다는 점에 있다. 대체로 9월부터 두 달 간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7명 내외를 초청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와 인도까지를 포괄하여 동아시아의 유력한 전문인들을 초청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국가가 참석하기는 어렵고 두 해에 한번 꼴로 나라가 배정이 되는 셈이다. ALFP는 참가자들의 지적인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약 4년에 한 번 꼴로 기존의 참가자들이 함께 다시 모여서 그동안의 내용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ALFP 프로그램의 핵심은 활동가에 있기 보다는 동아시아라는 주제에 무게 중심이 더 실려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 모임들과는 달리 활동가들의 참가를 열어두고 있으며, 현장을 가진 전문가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ALFP의 모임을 통해서 활동가들이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학문세계와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예컨대 ALFP 자체는 전문가들 간의 세미나에만 의지하지 않고 현장방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필드워크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ALFP가 일본이 주관하면서 현장학습의 장소가 일본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다. ALFP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동아시아의 다른 곳에서도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나, 그 영역을 좀 더 넓혀 아시아 전체가 필드워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ALFP가 다루는 주제는 해마다 주최 측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다루어 온 주제는 아래 <표 II-4>와 같다.⁴⁹ 지난 10년의 주제를 살펴보면

47- 재단법인 국제문화회관은 일본과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 문화를 교류하고 지적협력을 통해 국제 상호이해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1952년 미국의 록펠러재단의 기부를 중심으로 국내의 단체 및 개인들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www.i-house.or.jp>.

48- 이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초청하고 있다.

49- 본 표는 <http://www.i-house.or.jp/jp/ProgramActivities/alfp/index.htm>에서 각년도별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2003년과 2005, 2006, 2007년

초기에는 아시아와 지식인에 대한 개념에서 시작하고 있으나 점차로 주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의 경험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지식인의 역할과 행동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두 달 동안 집중적인 세미나와 현장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이를 ‘공동작업형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ALFP는 국경과 전문영역을 넘나드는 지적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해가고자 하는 목적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4> ALFP의 연도별 주제

Year	Theme
1996	Intellectual Concerns and Critiques in Southeast Asia
1997	Culture, Development, and Emancipation: the search for a new paradigm
1998	Asia in Transition: Localizing Strategies, Globalizing Processes
1999	Global Challenge, Local Response: Asian Experiences and Concerns
2000	Action and Reflection: Experiences of Globalization in Asia
2001	Rethinking Existing Paradigms: Public Intellectuals in Asia
2002	The role of Public Intellectuals in Changing Asia
2004	Acting Asian: Contradictions in a Globalizing World

3. 재정적 인프라 현황

재정적 인프라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을 위한 자원 조달에 대한 것이다. 국가를 벗어난 교류협력 활동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이 재정적 인프라인 것이다. NGO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기업, 재단, 국제기구의 지원금 등 크게 네 가지인데, NGO들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

은 프로그램을 했으나 그 자료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 생략되었음을 밝혀둔다.

관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적 인프라로 보았다.

NGO들은 어디나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활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본 및 권력과 대적점에 서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적 연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3세계의 경우에는 개발 NGO들이 정부를 대행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빈곤문제와 환경문제 등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비롯한 국제적 지원을 다양한 형태로 받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국가만으로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는 시민사회가 생산하는 공공성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비록 시민단체들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영역과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권력과 자본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대됨으로써 사회발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평가와 믿음에 의해 시민사회 영역은 항구적인 존재이유를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NGO들은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원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국제교류협력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원 조달이 쉽지 않다. 일례로 NGO 국제회의를 조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주최 측 NGO에서는 이를 조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개별 NGO의 경우에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⁵⁰ 그러다보니 NGO의 국제교류협력은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 성격의 행사들로 치러지는 경향이 있고, NGO들의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자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활발해지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⁵⁰- 금년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GPPAC 동북아위원회 회의 참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NGO들은 많은 고민들을 해야 했다. 재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가 출자한 한국국제교류재단, KOICA 등은 물론 최근에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방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향도 점차 늘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교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아직 크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포스코가 기존의 포스코장학회를 2005년 포스코 청암재단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아시아시민사회 육성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남재단이 운영하는 동아시아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남포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민간재단들로는 인권재단(1999), 여성재단(1999), 아름다운 재단(2000), 환경재단(2002) 등이 있다. 이들 재단의 특징은 그동안 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이 재단을 출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재단들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였거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출자하거나 민간 기업이 출자한 재단과 비교할 때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동아시아와 관련하여 조금씩 재정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중앙정부가 동북아 NGO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연구원 및 재단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NGO에 재정지원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화 사업으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를 찾기가 더욱 쉽다. 2003년부터 경기도에서 진행해온 ‘세계생명문화포럼’과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주평화포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명확하게 NGO간의 교류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지역 모두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생명문화포럼은 지식인, 활동가, 예술인 등이 중심이 되어 있는 반면 제주평화포럼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중심

이 되어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이 새로운 교류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광주 5.18재단 등에서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역할을 도모하고 있고, 인천 또한 황해문화를 중심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지 오래되었다. 최근에 평창을 비롯하여 대구, 인천, 여수 등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듯이 지역에 따라서는 동아시아 거점으로 지역의 이미지와 아이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재정적 지원프로그램은 거의 대칭적인 기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협력단과 국제교류기금이다. 이름도 유사하여 영문으로는 국명만 다른 채, 전자는 KOICA와 JICA로 후자는 Koan Foundation과 Japan Foundation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두 조직은 설립배경과 취지도 닮아 있어, 국제협력단의 경우는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NGO와의 협력 속에서 하고 있으며, 국제교류기금은 광범위하게 민간인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발견하기 어려워 본 글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1) KOICA

공적개발원조는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중 무상원조를 담당하기 위해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KOICA는 제3세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95년에 NGO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해외봉사단 파견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KOICA가 NGO들의 교류협력을 위한 재정 지원을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업수단별로 보자면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해외 지원 NGO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봉사단을 파견함으로써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외에도 해

외 인력을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하거나 긴급원조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도국의 정책입안자 및 기술 인력이기 때문에 NGO 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해외봉사단 파견의 지원액은 다음 <표 II-5>에서 보듯이 전체 지원금액 중 11.6%에 달하고 있다. NGO에 대한 지원까지 합치면 KOICA의 예산 가운데 13.7%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

<표 II-5> 해외봉사단 파견 세부사업별 지원액

세부사업	지원액	비율
총계	747,175,360,107	100
인프라건축	230,261,400,841	30.8
물자지원	213,110,397,521	28.5
긴급원조	19,710,457,504	2.6
개발조사	21,833,890,285	2.9
연수생초청	58,086,609,170	7.8
전문가	4,397,880,904	0.6
의료단	7,469,660,331	1
태권도	4,946,975,413	0.7
해외봉사단	86,959,789,423	11.6
협력요원	8,883,153,033	1.2
협력의사	7,326,531,798	1
NGO	15,805,128,871	2.1
행정성경비	60,414,623,347	8.1
개발인식증진	7,968,861,666	1.1

지금까지 KOICA가 파견한 해외봉사단은 출국인원 기준으로는 2007년 8월 현재 3,905명이고, 이 가운데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2,657명이다. 이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2,024명으로 남성 1,882명보다 많고, 연령으

⁵¹-<http://stat.koica.go.kr/>에서 발췌 인용함

로는 20대가 1,714명, 30대가 1,639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40대 391명, 50대 112명, 60대 이후가 49명으로 연령이 높아져도 해외파견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노소별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해 있다.⁵² KOICA의 통계에 따르면 이들 봉사단 인원이 계속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당자와 인터뷰를 해보면 해외 파견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후에도 기회가 되면 국제협력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KOICA의 지원을 통해 몽골에서 유목민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젊은 봉사자들과의 인터뷰는 이들이 몽골 언어를 익혀가면서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촌나눔운동이라는 NGO를 통해 일함으로써 NGO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20대 여성들인 이들은 직장에 바로 취직하지 않고 폭넓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시아라는 현장이 자신이 향후 일해 갈 영역으로 분명하게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해외봉사단에 대한 KOICA의 지원이 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협력기관인 NGO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KOICA의 재정지원이 국내 NGO들의 해외파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협력 인프라를 구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2) 일본국제협력단(JICA)

일본의 공적개발원조는 현재 유상차관을 집행하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과 무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으로 집행기관이 나뉘어 있다. 1964년에 일본국제협력단의 전신인 해외기술협력단(Overseas Technology Cooperation Agency)이 설립되어 기술지원을 담당하다가, 다른 협력 기관들과 합병되어 1974년에 새롭게 출발한 일본국제협력단은 설립 당시에는 기술 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그

52-본 통계는 KOICA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것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1,094명, 농촌개발 500명, 보건의료 667명, 환경 및 기타 273명, 정보통신 746명, 행정제도 65명, 산업에너지 560명이다.

이후 일본 경제가 성장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재난 구호, 인간 안보, 환경같은 분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공적개발원조에는 일본 NGO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본 NGO들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NGO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두 종류가 있다.

NGO 프로젝트를 위한 무상 지원은 두 가지 종류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1989년에 시행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NGO들에게 주는 ‘풀뿌리 인간안보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Grant Assistance for Grassroots Human Security Projects)’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99년도에 도입된 국제적 긴급구호 활동을 하는 NGO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다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NGO의 긴급지원 활동을 위한 보조금(Grant for Supporting NGO Emergency Activities)’이다.

또한 NGO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일본 NGO의 전문성과 프로젝트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NGO 프로젝트 교부금(NGO Project Subsidy)’과 NGO의 조연자, 스터디 그룹, 연구자를 포함한 NGO 인력의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NGO 역량구축 지원금(Capacity Building Support for NGOs)’이 있다.

일본국제협력단 역시 해외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해외협력봉사단(JOCV: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은 1965년에 처음 파견되었다. 일본해외협력봉사단은 2005년을 기준으로 80개국에 1,804명이 농업, 삼림과 수산업, 제조업, 기계, 보건과 위생 등 7개 분야에 파견되었다.⁵³ 2005년에 해외협력봉사단이 파견된 세부 분야는 다음 <표 II-6>과 같다.

53-1965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에 파견된 총 수는 28,755명에 이른다.

<표 II-6> 2005년 8월 현재 일본해외협력봉사단의 세부 파견분야

세부사업	파견자 비율
교육 및 정보 서비스	44.9%
보건 및 복지	18.5%
농업, 산림 및 어업	16.0%
스포츠	6.5%
유지 및 작동	3.3%
토목 공학 및 건축	2.2%
제조업	1.4%
기타	7.2%

출처: 일본국제협력단 영문 홈페이지.

(3)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정부가 출자한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재단이다. 외교 통상부에 속한 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출범하여 국제교류행사의 지원과 관련 인사를 해외에 파견 혹은 초청하는 일을 주로 담당해왔다. 동시에 국제교류재단은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해외에서의 한국학 관련 지원 및 재외동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대상은 대부분 한국학과 관련된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가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도 교수, 언론인, 기업인, 관료 등이 중심이다. NGO 활동가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펠로십 프로그램이 있으나 대부분 학위과정 및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박물관 큐레이터 등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이 한국어 연수 및 체험, 장학사업 등이라는 점에서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적으로 지원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

또한 포럼 및 국제회의를 지원하고 있어 경쟁률이 높지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다만 국제교류재단이 사업 안내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각국의 정부, 재계, 언론계, 학계, 사회문화계 등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참여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사업에 집중되

어 있다.⁵⁴ 동아시아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는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포럼’, ‘한·일 포럼’, ‘한·중 미래포럼’, ‘한·러 포럼’, ‘한·아세안 포럼’, ‘한·일 대학생교류’ 등의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여기에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점차로 NGO들의 국제교류활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주제와 내용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NGO들의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⁵⁵

(4)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

일본국제교류기금은 1972년에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해 독립적 단체로 설립되었고, 요즈음은 국제화 시대에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교류를 통해 일본에 우호적인 세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의 인적 교환,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 해외에서의 일본학 및 지적 교류 증진 등 크게 세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중 특별히 NGO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는 예술과 문화 교환 프로그램 중에서 공동체 지도자 및 사회연구 분야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과 각 국가들의 민중들과 젊은이들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환 프로그램이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마찬가지로 외무성이 주관함으로써 일본과 관계된 것, 다시 말하면 한·일, 일·중 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양국 간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일본어 및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일본국제교류기금은 북경과 서울에 각각 외무성 산하의 일본문화원과는 독립적으로 서울일본문화센터와 북경일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4-<http://www.krf.or.kr> 사업안내 가운데, 포럼 및 국제회의의 참조.

55-2005년에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의의 주최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회 대북협력 국제NGO 회의’의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한국 참가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다.

나. 민간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한국사회의 시민사회 성장과 더불어 발전한 것 가운데 하나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인권재단’, ‘아름다운 재단’, ‘여성재단’, ‘환경재단’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대체로 2000년을 전후해서 만들어진 이들 재단들은 시민운동의 성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에서 만든 재단과 비교하여 자금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이들이 지원하는 영역과 주제는 한국의 시민운동들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재단이 초기단계에 있고 재정이 튼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의 새로운 실험들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1) 한국인권재단

한국인권재단은 1998년 유엔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가 계기가 되어 1999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인권재단은 ① 인권에 관한 연구 활동 지원, ② 미래세대 육성, ③ 인권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④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재단이 아시아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넓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 인권활동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아시아 인권백서 발간 작업 또한 아직은 조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인권재단이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영역은 동북아를 배제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권이 취약한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⁵⁶ 한국인권재단이 프레스안과 공동으로 기획한 2006년 5월 18일부터 8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 총 11회에 걸친 다음 강좌는 한국인권재

⁵⁶ 인권재단이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주로 소재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국의 경우,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hai Coalition for Human Rights Defenders (HRD-TH), 말레이시아의 경우, SUARAM(a main human rights NGO), 필리핀의 경우, IID(Intiative for International Dialogue), Philippines Alliance for Human Rights, 인도네시아의 경우, YLBHI(Yayasan Lembaga Bantuan Hukum Indonesia), KONTRAS(Komisi untuk Orang Hilang dan Tindak Kekerasan, INFID(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 Development) 등이 있다.

단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 <1> 한국인권재단 공동기획을 시작하며: ‘네팔 민주화’는 성공할 수 있을까?
- <2> ‘세계의 지붕’ 네팔 이야기: “하루 10시간씩 축구공 만들어 보실래요?”
- <3> 아시아의 아이들, 그리고 아동노동: 버림받은 지상의 낙원, 카슈미르
- <4> 전쟁 고통 속의 일상: 아시아 여성들은 왜 인신매매로 내몰리나?
- <5> 인신매매와 불법이주: “대테러 동맹’을 상대로 우리도 공조해야 한다”
- <6> 인권 시대와 대테러 시대의 공존: 쓰나미 이후 더 고통받는 사람들
- <7> 인간이 만든 또다른 재앙: “소수민족의 자결권 보장, 말만으로는 안 된다”
- <8> 웨스트 파푸아: 갑자기 사라졌다 주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 <9> 인권침해 당하는 인권운동가들: ‘명예살인’, ‘염산테러’로 스러져 가는 여성들
- <10> 묵인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버마를 ‘겁 많은 한국’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요”
- <11> 한국은 ‘한국 밖’을 모른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북한, 몽골, 대만 등에서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인권재단이 동북아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아름다운 재단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출범한 아름다운 재단은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고 탄생하여 한국사회에서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왔다. 하지만 조성된 기금을 기부자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재단은 상대적으로 기부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만 하는 제한성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2002년에는 기금의 목적 가운데 ‘국제NGO 연대 기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아직은 이 기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시아지역 NGO들의 네트워크 발전 및 연대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재까지 아름다운 재단에서 국제연대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빈곤, 차별, 대안모색 등의 다른 사업에 비교하면 미미하다. 실제로 아름다운 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한 국제연대활동사업은 KT의 지원으로 2007년에 시작한 NGO 활동가 아시아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아름다운 재단의 전체사업 구조에서는 ‘지구시민과 연대’라는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7명을 선발한 이번 연수지원 프로그램은 ‘아시아 NGO 센터’,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4개월~6개월간 거주하면서 현지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지역의 사회를 배우고 자신을 재충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시작한 사업이라 진행되는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것인지와 이러한 지원이 재정적 인프라를 확고하게 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여성재단

1999년에 설립된 여성재단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참여와 성평등 문화의 정착, 그리고 여성 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른 재단들이 자체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여성재단의 경우는 대체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재단은 일단 국내여성 혹은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지역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으로는 국내 여성 활동가들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여성 활동가들의 글로벌 리더십 육성 지원 사업은 여성계의 요청과 자체 사업인 새날기금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2007년부터 진행된 새로운 지원 사업이다. 올해에는 삼성의 이웃사랑성금으로 모금된 총 2억 5천만원규모의 지원금을 13개 단체가 선정되어 지원받았다. 아래 <표 II-7>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단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고 있는데, 지원사업도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네트워킹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국제 활동지원 및

아시아여성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다.⁵⁷ 이 사업은 사업주체(단체들)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 간은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프로그램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과와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지원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은 국내 여성단체들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혹은 국외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역시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57-<http://www.womenfund.or.kr>에서 인용.

<표 II-7> 2007년 여성 활동가 글로벌리더십 육성 지원사업

사업구분	지원 사업수	신청단체	지원사업명
국제대회 개최 및 운영	3개	사상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피해자 중심의 성매매 왜 근절되어야 되는가?” 국제회의
		여성성공센터 W-ing (구 은성원)	글로벌 여성인권 영상제 (Global Women Rights Film Festival)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8, 여성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킹 형성 및 강화	5개	광주YWCA,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예비여성정치지도자의 글로벌 리더십 연수
		사여성환경연대	공정무역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생산자 지원을 위한 SGP(Small Grant Program)개발
		한국여성단체연합	유럽의 커뮤니티 조직에서 배운다 스웨덴-독일-프랑스의 “돌봄과 교육공동체” 탐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이주여성 인권지원, ‘국경을 넘어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폭력 추방! Global Friends 만들기 캠페인”
국제활동 지원	3개	사결혼이민가족지원 연대	국제결혼문제해결을 위한 베트남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네트워크 구성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일본 통합선거 체험프로그램 - ‘폴뿌리 생활자치의 현장을 가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신매매성 국제결혼방지를 위한 베트남, 캄보디아와의 연대구축
아시아 여성인재 양성	2개	안산외국인 노동자센터	여성활동가의 다문화 이주여성 언어 문화체험 프로그램
		언니네트워크	내 안의 아시아, ‘우리가 만드는 아시아

(4) 환경재단

환경재단은 2002년에 창립하여 다른 재단에 비하여 비록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아시아 사업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미 환경문제가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협력과 관련하여 환경재단은 ‘녹색 아시아(Green Asia)’라고 하는 아시아 환경 연수프로그램과 일본의 피스보트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린피스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아시아 환경 현장방문 사업은 시민단체 등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상근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3명이 한 팀이 되어 아시아 전역의 국가 혹은 지역을 선택하여 최장 3주간 현장학습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이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면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팀의 책임 하에 기획 운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장방문사업은 취재형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언론매체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녀온 팀들은 동영상 보고서 및 현장 보고서를 에세이 식으로 작성하여 사회에 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2004년부터 11개 시민단체의 환경운동가 33명이 아시아 10개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총 28개 단체 84명의 활동가 및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환경재단과 피스보트가 공동주최하는 그린피스보트 프로그램으로, 2005년 첫 출항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0년 동안 아시아의 평화와 환경을 위한 항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한·일 양국의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아시아의 주요 지역을 함께 돌아보며 역사, 사회, 경제,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프로그램인데, 주요 테마는 ① 지구온난화, ② 동아시아 생명공동체, ③ 에너지문제, ④ 인권문제, ⑤ 동물보호와 먹거리, ⑥ 한·일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⑦ 선상에서 문화 및 이벤트 진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아직 프로그램이 안착했다는 느낌을 갖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피스보트가 진행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모집기간이 길지 않으며 충분히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경비의 일부를 환경재단이 후원하지만 그린피스보트에 승선하는 일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린피스보트가 동북아의 NGO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자본의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포스코 청암재단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는 청암재단을 통해 아시아 인재의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기존의 장학재단을 확대 개편하여 2005년에 새롭게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출범 취지에 ‘차세대 인재육성, 아시아네트워킹, 사회 공익적 역할 확대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⁵⁸ 포스코 청암재단의 사업 가운데 ‘포스코아시아펠로십’과 ‘시민단체 활동가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포스코 아시아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아시아 차세대 리더십 지원프로그램으로서 경제,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증진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면서 공동과제를 찾아내 공동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이 다섯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⁵⁹

① 아시아 출신 한국 유학생 장학

- 대상 지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전역
- 유학생 선발: 매년 대학원 석사과정 35명
- 지원규모: 연간 70명이 한국에서 수학하는 2년간 등록금과 생활비

② 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

- 아시아 우수 대학의 박사과정으로 유학 가는 한국인 학생에게는 학비와 생활비를, 아시아 이슈를 연구하는 한국인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비와 아시아 방문 연구시 체제비를 지원한다.

③ 아시아 우수 대학 장학

- 아시아 각국의 우수대학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현지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④ 아시아 인문 사회 연구 및 포럼

- 본 사업은 아시아 지역의 인문사회 이슈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아시아 공통의 학술이슈를 토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움이 결합된 사업이다.

58- <<http://postf.org/app/intro/01.htm>>.

59- <<http://www.postf.org/app/found/02.htm>>.

⑤ 아시아 문학지 발간 지원

- 아시아의 문인,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아시아의 문화와 가치를 심층 연구하고, 우수 신진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학을 통한 역내국가 간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을 위해 아시아 문학지 계간 <ASIA>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포스코 청암재단은 시민단체 활동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북미지역의 대학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10명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연수비를 지급하며 총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동아시아 협력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활동가들이 향후 식견을 넓히고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⁶⁰

(6) 광주5.18기념재단

광주5.18기념재단은 광주시민, 해외동포를 포함한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보상을 출연받아 1994년에 출범한 민간재단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998년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 재원이 조성되어 사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초기에는 민주화 지원과 과거사 바로잡기 등 5.18과 관련된 사업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5.18 정신을 국경을 넘어 실천 하자는 취지하에 국제사회에서의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평화문제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해왔다.

이 가운데 5.18기념재단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사업은 ‘광주아시아인권학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단은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한국의 민주주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경험을 나누어, 교육과정에 참여한 아시아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청년들이 이후 자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민간교류 활동의 대표적인 사업이며, 인권과 관련하여 아시아의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네트워크의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⁶⁰-<http://postf.org/app/found/05_1.htm>.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네 차례 걸쳐서 1회에 20명 정도가 참여하였고 2주 혹은 3주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다.⁶¹ 광주아시아인권 학교는 광주라는 역사성과 지방이 갖는 정체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아시아 교육의 주요한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지방(도시)에서 아시아를 상상하고 아시아의 활동가들이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미래를 구상하는 일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다.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의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운동의 보편성과 각국의 특수성 및 역사성을 오히려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제도적 인프라 현황

제도적 인프라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을 용이하게 해 주는 법률, 규칙, 기구에 대한 것이다. 제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정치와 경제 각 부문에서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적 규칙, 순응절차, 표준화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서 제도는 좁은 의미의 제도, 즉 공식적인 규칙이나 법률, 그리고 그에 의거한 기구에 한정해서 다룬다.

제도적 인프라는 NGO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북아 시민사회 구성의 밑거름을 정착시키는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 단순히 새로운 규범이 아니라 NGO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를 발전시키는 규범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제도적 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을 제도화하기에는 아직 자원도 경험도 그리고 상상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NGO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와 시민들의 자발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성 등이 각 국가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화를 정부, 기업 혹은 국제기구가 맡아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쉽지

⁶¹ <http://www.518.org/main.html?TM18MF=A020102&getCate=01&page_act=detailview&getRid=63> 참조.

않은 일이다.

본 절에서는 제도적 인프라와 관련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법적인 차원에서 한·중·일의 NGO협력과 관련된 제도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 이외의 주체로서 NGO와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의 가능성으로서 대학이 제공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기구가 설립한 교육기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첫째의 경우에는 아직 초국적 협력의 틀을 제도화한 법적인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둘째 및 셋째의 경우에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가. NGO 관련 법률 현황

(1) 한국의 민간단체 관련 제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활동이 활발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운동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체제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인 최근의 일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고 때로는 반대하기 위해서 제도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서 이미 1999년 비영리법인을 사회적 실체로 인정해 주고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한국정부도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민주화된 정부 하에서 이러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2000년 1월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먼저 이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이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 내에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 생략)...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의 내용에 따라 제5조에서 11조에 이르는 법적 지원을 받으려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2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 제3조 및 제4조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단체의 목적이 ‘공익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접수받는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갈등관계가 심각한 NGO의 경우 불리한 대우를 받을 염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2조 4항과 5항의 100인 이상 그리고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을 입증할 것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법률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의미있는 다양한 NGO들이 이 법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기란 쉽지 않다. 일정한 규모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5조 이하의 지원을 받는 것 역시, 각각의 NGO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선택한 사업에 대해 단체들 간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제도적 지원이 자칫하면 NGO의 다양성이 약화되고 정부가 선호하는 사업 중심으로 왜곡될 위험이 존재한다. 게다가 지원내용 중 경상비 및 활동가의 급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부사업을 위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NGO에 관한 제도적 지원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CMS제도이다. CMS는 기존의 회비를 은행을 통해 자동으로 이체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작은 단체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 운영비가 부담스러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제도와 달리 NGO들이

CMS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 역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혜택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이나 기업에서도 자원봉사의 경험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사회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좀 더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단체의 영역을 공익목적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뭉기보다는 시민단체의 공익추구 활동이 다양한 사회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시민사회를 지원 육성하는 학교를 세운다거나 시민단체가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신용금고를 설립한다거나 하는 것 등은 학교와 관련된 법률과 금융과 관련된 법률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NGO자체의 신뢰성과 윤리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기 마련이며 많은 부작용도 염려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회영역으로 확장되고 이것이 동북아 사회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NGO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사회적 실험을 과감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일본의 민간단체 관련 제도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빠른 1998년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입법화되었다. 그 배경은 1995년의 고베 대지진에서 보여준 생활에 밀착해 있던 NGO들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눈부셨던 반면 정부가 보여준 무력함이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NPO법은 한국의 NGO법과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을 등록시키고 지원하는 체계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다.

먼저 한국의 경우, 1년 이상의 활동실적과 100인 이상의 회원을 요구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활동가(회원)가 있으면 성립이 가능하도록 보수를 받는 활동가(회원)가 전체 회원의 1/3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법과 비교하면 색다른 규정인데, 그 이유는 일본의 NPO법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육성 강화하기 위한 취지가 깔려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것 또한 한국과는 다른 형태로 NPO의 특징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차이는 한국의 NGO가 모호하게 ‘공익활동’을 정의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12개의 활동영역으로 공익활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① 보건, 의료등의 복지활동, ② 사회교육을 촉진하는 활동, ③ 마을만들기를 촉진하는 활동, ④ 문화, 예술 혹은 스포츠를 진흥하는 활동, ⑤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 ⑥ 재난구조 활동, ⑦ 지역안전 활동, ⑧ 인권보호 및 평화를 추진하는 활동, ⑨ 국제협력의 활동, ⑩ 남녀공동참가사회를 형성하는 활동, ⑪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한 활동, ⑫ 각 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연락, 조연 또는 지원활동 등이다.

이상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은 법이 규정하는 NPO의 활동은 정부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기능 곧 정부에 보조역할을 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후 일본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거버넌스 구축 혹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났지만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형태가 발전하는 경향을 낳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1998년 NPO법이 제정된 것과 더불어 2000년에 도입된 개호보험제도에 따라 많은 사회복지 관련 NPO들이 지역에서 빠르게 활성화되었다. 그 이유는 개호보험제도에 따라 NPO들이 정부로부터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었음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을 경상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복지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단체들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지만, 사회 전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보조역할을 하는 수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데 더 많이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3) 중국의 경우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 및 일본과 다르게 중국공산당 일당체제하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법률이 다른 형태로 일찍 발달하였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법률이라기보다 관리, 지도하는 대상으로 민간조직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사회단체와 민간운영 비기업 단위의 관리 사업을 강화할 것에 대한 통지’가 중국공산당과 당무원에서 지침으로 하달된 1996년 이후, 1998년 10월에 수정된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와 『민간운영 비기업 단위 등가입시방법』 등이 반포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조항(주소, 명칭, 상근자) 외에도 먼저 50인 이상의 개인회원이나 30개 이상의 단체회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국적인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10만 위안의 활동자금,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3만 위안 이상의 활동자금이 필요하며 독립적으로 민사 소송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²

이러한 규정은 중국에서 태생적으로 합법적 NGO가 중국정부의 입장에 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되기 위한 제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NGO는 몇 가지 커다란 전환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경제개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파급효과들, 예컨대 빈부격차 및 이주노동자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NGO들이 단순히 관변단체로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운동을 하는 경우가 점차로 늘고 있다는 점과 지역에서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활동을 하는 NGO들의 증가이다. 둘째, 환경문제 및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 재해문제가 전염성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활성화된 운동들, 셋째, 주변국 및 세계적인 현상으로 NGO들의 국제협력과 외교적 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그 카운터 파트로서 국제협력을 위한 NGO의 필요 등이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해석하면 NGO에 관한 중국 내부의 변화가 NGO 들 간의 동아시아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점차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중국의 경우 국가를 넘어서는 NGO들의 활동을 지원 장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 NGO들에게 제한을 두었던 국제 활동을 허락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 자체가 소극적인 형태일지라도 NGO들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내용상으로는 NGO이지만 등록의 어려움을 피하고 관리와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불법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와 아예

62_이남주,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서울: 폴리테이아, 2007).

영리단체로 등록하여 사업 단위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⁶³. 특히 최근에는 법적인 투쟁을 하는 조직, 사람, 그룹이 많아지면서 법률 상담 자체가 중요한 NGO 활동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 형식으로 NGO 활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나. 대학 교육기관 현황

최근 한국의 대학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NGO 대학원 혹은 NGO 학과를 만들면서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이라는 제도권이 NGO들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해서 NGO 대학원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았다. 김운호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NGO 과정은 다음 <표 II-8>과 같다.⁶⁴

63_ 리징평 교수(북경대 시민사회연구소 소장)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단체는 분명한 비영리조직이다. 하지만 자양(自養)의 문제로 활동경비 마련이 사회단체 존재와 발전의 관건으로 되고 있다. (이들 비영리조직의) 자금 마련의 경로와 방법은 다양한데 이 중에는 경영활동 중사도 포함된다. …특히 일부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 특혜는 그들의 일정한 영리활동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 이러한 사회단체의 자익성과 호익성은 동일한 의미로 사회단체 전체의 자익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회단체의 지도부 내부의 자익이 아니다.’ 리장평, ‘NGO문제에 관한 몇 가지 연구와 토론,’ 『5·18광주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한국NGO학회 공동주관, 2006년 5월 23일), p. 228.

64_ 김운호, “한국NGO 교육의 현황과 방향,” p. 3.

<표 II-8> 대학별 NGO 대학원 현황 및 설립 목표

대학	목표	설립 (교육) 목표
경희대 NGO대학원		문명창달의 주역인 인간, 사회, 국가에 대한 학제간 교육, 연구를 통해 평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21세기 NGO시대'를 열어갈 지도자와 전문가 양성
성공회대 NGO대학원		시민사회 및 NGO에 대한 연구를 진작하고 시민사회지도자 양성 및 NGO 간사의 재교육을 통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활성화 도모
경남대 일반대학원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NGO 전문가 양성,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하는 NGO 전문가 양성,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성실하게 봉사하는 NGO 전문가 양성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사회 성장에 따른 국정외의 주요 활동에 NGO의 활성화를 추구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시민단체 구성원, 사회봉사 활동자, NGO 전문가를 대상으로 NGO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배양
경희대 사이버NGO학부		NGO를 다양한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주역의 양성
이화여대 NGO연계전공		시민단체나 국제 NGO의 실무자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과 세계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화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실무습득기회 제공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대학의 NGO 과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학부에 개설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특수대학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의 대상이 NGO 활동가 혹은 NGO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NGO는 사회운동보다 자원봉사활동 및 국제연대, 환경 및 복지 등 제3섹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왜 NGO를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혹은 이슈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보다 현장성 있는 내용들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연대를 실습하거나 외국인들의 참가가 가능한 수업은 열려 있지 않다는 점에서 NGO대학원은 자칫하면 복지대학원 혹은 경영대학원 및 정책대학원의 연장선에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대학원에 개설된 것과 달리 국제대학원의 형식으로 동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은 현재 성공회대학교와 아주대학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두 대학은 명실 공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학생 혹은 NGO활동에 관련된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성공회대학교가 전액 장학금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활동가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1년간 집중코스인 반면, 아주대학교는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모두 입학이 가능하며, 아프리카와 동남아 그리고 중국의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이 학생들이라는 점이 성공회대학교와 다른 특징이다.

(1) 성공회대학교 비정부기구 석사학위 과정

성공회대학교의 아시아 비정부기구학 석사학위과정(Master of Arts in Inter-Asia NGO Studies: MAINS)은 2007년 처음 실시되었다.⁶⁵ 따라서 아직 1기생을 졸업하지 않은 채로 봄 학기와 여름 학기만이 끝났기 때문에 쉽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성공회대학교는 대학이 아시아 활동가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제도화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본 대학원과정은 첫 시도라는 점에서 얼마큼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제도화의 몇 가지 원칙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달리 새로운 제도적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생각해보아야 할 주요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영어로 강의되는 NGO학이 대부분 서구 중심이라는 점에서 아시아의 경험과 관점으로 아시아의 NGO학을 개발하고 현장을 학습의 공간과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모집광고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듯이 'MAINS는 지구화 맥락에서 전개되는 아시아 시민사회와 사회변동을 아시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아시아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축적해 나아가고자 하는 아시아권 최초의 NGO 연구전문 학위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⁶⁵ 다음의 한겨레 뉴스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ngo/193462.html>>.

둘째,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동가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에게는 입학할 허가하더라도 전액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얼마나 가능한가 하는데 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는 5.18재단,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일부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셋째, 본 과정은 1년에 끝나는 이른바 쿼터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는 1년 이상을 비우기 힘든 활동가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으로 끝나는 과정이 학문적 질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왜냐하면 활동가들이 1년 안에 코스와 논문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과정은 수료 과정이 아니라 학위과정이기 때문에 석사학위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2)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NGO학과

아주대학교는 국제대학원 안에 MBA와 같은 수준에서 NGO학을 마련하고 200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국제대학원에서 NGO학과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내 최초이고 아직도 유일한 과정이다. 대학원 안에 정식 학과로 구성되었고 학생들의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회대학교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대륙에서 오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상이한 기대 수준을 조율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하여 이미 석사과정을 배출하기 시작한 아주대학교의 NGO학과에는 대부분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카메룬이, 동남아의 경우에는 네팔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 특정국가에 다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비로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생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외국어 강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국내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대체로 한 학기에 5명 내외가 새로 입학하므로 전체적으로

NGO학과 학생들은 20여명이 되고 있다.

(3) 중국의 청화대학교 NGO 연구센터

중국의 청화대학교 NGO 연구센터는 1998년에 설립되었다. 현장 활동가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화대학교의 NGO 연구센터는 현장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NGO 연구센터는 공공정책대학원에 속해 있으며 기본적인 시각은 공공행정 혹은 공적 관리로서 NGO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NGO활동가들의 교육보다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중심센터라고 할 수 있다. NGO에 관한 센터의 연구는 중국 NGO의 현황을 비롯하여 NGO의 제도화, NGO활동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른 NGO의 역할과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NGO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4) 일본의 교육기관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NGO 혹은 NPO대학원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대학원 혹은 공공정책대학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대학은 1994년에 독립대학원으로 만든 국제공공정책연구과를 창설하였고 교육과정에서 NPO 및 NGO를 가르쳐왔다. 특히 2002년도에는 대학 내에 NPO연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일본 NPO학회 사무국을 학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이외에도 와세다대학이 대학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리츠메이칸대학이 학부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학 학부간 연구소(inter-facult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등 일본 대학은 직접 NGO, NPO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정을 설립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아시아태평양학과 및 공공정책대학원, 국제대학원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 국제기구의 교육기관

(1) 유네스크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기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 교육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적 인프라로는 2000년 한국정부와 UNESCO와의 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을 들 수 있다. 국제이해교육원의 핵심적인 주제는 평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이해에 대한 문화적 상대주의와 존중, 비폭력적인 문제해결능력, 인권보호와 참여의 증대,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정의가 국제이해교육원이 주제로 선정한 평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국제이해교육원은 먼저 국제이해교육에 필요한 조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사례와 다문화의 내용들을 ‘국제이해교육’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여 소개하고 있다. 평화를 핵심으로 한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재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심포지움 및 포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유네스크 신탁기금으로 국제이해교육원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⁶⁶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사, 교육자 및 관련된 개인들에게 한 달 간 아태지역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또는 독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평화담론의 확산과 평화교육의 개발 그리고 평화교육을 전달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① 지구화와 세계화 이슈 ②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 교육 ③ 평화와 평등 ④ 인권 ⑤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2) 유엔대학(UNU: United Nations University)

국제이해교육원이 한국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졌다면 UN대학은 일본의 적극적인 의사로 1973년 동경에 세워졌다. UN대학은 UN정신을 실현할 것을 원칙으로 설립되었으며, 유엔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관심에 대한 지식과 담론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

66_ <http://www.kr.unescoapceiu.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92&Itemid=83>.

기능도 수행하며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유엔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단기간 연수, 장기간 연수, 학위과정 관련자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다. 단기연수의 경우에는 매년 유엔대학이 실시하는 국제교육과정으로 전 세계의 학생들 60명을 대상으로 한다. 개도국 학생들 20명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주며 대체로 국제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매해 여름에 국제적 갈등에 관한 문제와 갈등중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식량문제, 자연자원 문제, 바이오테크놀로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연수의 경우는 대개 3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교육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각지에 있는 관련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이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등 특정한 이슈에 대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석박사과정의 프로그램은 유엔대학이 직접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유엔대학이 인턴십의 형태로 다른 대학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제공하는 학위과정 프로그램, 그리고 박사 후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대체로 이들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주제라기보다는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5. 소결: 동북아 NGO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평가

동아시아 시민연대를 위한 활동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다. 첫째가 언어의 장벽이다. 정서와 맥락을 중시하는 아시아인들이 만나서 이른바 브로큰 잉글리쉬(broken english)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약점들이다. 둘째, 서로에 대해서 의외로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는 정서적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듯 보여도, 지난 20세기 동안 각기 다른 국가들을 만들어오느라 서로 단절을 경험해 왔고, 단절의 역사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기억에도 공백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셋째,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국의 시민사회맥락이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

과 서로 다른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비대칭적인 시민사회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낯설음과 막막함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 <표 II-9>는 평화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동북아 NGO 활동에 대해 활동가들이 분석한 SWOT 모델이다.⁶⁷ 이 모델은 약 100여명이 참가한 2006년 제주도에서 열린 평화활동가 워크숍에서 작성된 것으로, 한국 평화운동의 단면과 함께 국제연대의 단면을 한국적 시각에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표에서 동북아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의 문제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하나는 의사소통 인프라로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국제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제적 경험과 동북아 현장 경험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의사소통 인프라의 또 다른 저해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언어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초국적 협력은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IT를 통한 의사소통의 인프라는 기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재정적 취약함이 국제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평화활동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 환경, 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결국 동아시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인프라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지는 교류를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교류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신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

67_ 평화포럼, 『활동가들이 나누는 한국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한국평화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2006), p. 61. 당시 평화활동가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그룹별로 SWOT 분석을 한 바 있다.

<표 II-9> 국제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들의 SWOT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역사, 경험 등이 강점 ▶ 활동가들의 역동성, 다양한 연대의식 ▶ 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음 ▶ 비교적 종교갈등이 없음 ▶ 한국의 경제력 또한 힘이 됨 ▶ IT가 발전되어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강점(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단체간 경쟁의식 ▶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 ▶ 재정취약 ▶ 지역기반이 부재함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 국제적 시각이 부족 ▶ 과도한 과제로 모두 바쁨 ▶ 언어장벽 ▶ 현장경험이 불충분 <p style="text-align: center;">약점(W)</p>
<p style="text-align: center;">기회(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교류증대 ▶ 아시아에서 한국문화전파 ▶ IT발전으로 정보접근성의 기회가 증가 ▶ 전쟁과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평화 운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위협(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지역의 언어장벽 ▶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 시민사회의 의지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 ▶ 한·중·일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습관 ▶ 한국 기업의 아시아인 착취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동북아 교류협력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동북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해 부족과 정보부족은 동북아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에 관한 지식의 부족은 단순히 현재의 동북아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역사로서의 동북아 그리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동북아 등이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동북아는 오랫동안 냉전의 틀 속에 갇혀 있었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새로운 지역의 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북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틀은 새롭게 발견되고 창조되어야 할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동북아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인적 인프라, 재정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인적 인프라의 경우, NGO들 간에 양자 간 혹은 다자간의 관계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이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의 9.11 테러와 동북아 역사문제 등으로 동아시아에서의 NGO간 협력은 질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초보단계일지라도 양적인 측면과 이슈영역에서는 다양

한 영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교류가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와 재정적 인프라가 함께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적 인프라에 비하여 아직 제도적 인프라와 재정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정적 인프라에 관한 현황을 종합해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정부출연의 연구단체 및 재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긍정적인 요소들은 재정 마련을 시민사회가 스스로 하려고 나섰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에 의존하는 형태의 재정지원이 아니라 시민단체 배경의 자립형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아름다운 재단, 환경재단, 여성재단, 인권재단이 그러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현상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시민운동이 과격하고 일탈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시민운동의 성장이 활동가들의 성장과 지원없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이 다양한 형태의 공익 재단을 배출하였고 이들 재단들이 시민사회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지원활동이자 새로운 운동의 형태로 사회적 부를 구성하는 운동 곧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단의 사업목적이 동아시아 활동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의식이 성장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며 함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감된 비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북아 교류와 협력은 단순히 재정 및 제도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가치와 방향성에 관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엿보이기도 한다.

한편 동북아 NGO 간 교류협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요구도 높고 따라서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국가를 넘어서는 제도적 인프라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동북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조금씩 형성되어가는 초기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동북아 NGO협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들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한·중·일 각국이 아직 그 법률체계가 충분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법률체계의 기본 정비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한·중·일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NGO들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분야별 NGO가 각 영역의 NGO에 대한 통계를 만든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부처별로 등록된 NGO가 정부차원에서 파악되기도 하며 구(舊)『시민의 신문』 등이 과거 해마다 NGO에 관한 통계자료를 출간한 바 있다.

둘째, NGO들의 협력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한·일 간 혹은 한·중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적 인프라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한·일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이후 점진적 문화개방과 더불어 한·일 간의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한·일 간에는 김포-하네다간에 사실상 셔틀비행기가 다니게 되었고 까다롭던 비자도 사실상 면제되었다. 이러한 한·일 정상 간의 선언과 정부정책은 NGO 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협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의 인적교류가 법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경제협력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는 혼인에 의한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늘고 있다. 셋째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나 상호이해에 기여하고 있다. 첫번째 문제는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두번째 문제는 국외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원체계가 시급해지고 있다. 세번째의 경우는 국내로 찾아오는 아시아 유학생이 급증하는 것과 더불어 이

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단순히 대학차원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인들의 취업, 혼인, 학업 등을 매개로한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아시아를 삶의 공간에서 이미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젊은 그룹들 사이에서 점차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언어 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만을 실질적인 제1외국어로 생각하던 1980년대와 달리 1990년대에는 일본어를 배우는 광풍이 일었고, 최근에는 중국어가 붐을 이루어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영어이 외에 제2외국어로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고 이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실제로 그 지역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 제2외국어로 형식상 배우던 불어, 독일어와는 달리 일본어와 중국어는 생활에서 곧바로 접하게 되고 사용하게 됨으로써 실용적인 선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경험을 넓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다섯째, 동북아 국가들 간에 이해와 지식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 이미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는 ‘아시아의 창’, ‘남북의 창’ 등을 통해서 북한과 아시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거리에는 작은 아시아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먹거리 문화가 생활공간의 한복판을 이미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공부하려는 외국의 유학생들 가운데 아시아의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동북아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 대만, 몽골의 통계를 합치면 78.6%나 된다. 동남아국가인 베트남을 합치면 국내 유학생들의 80%를 훨씬 넘는 인원이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현재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북아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동북아 NGO들의 교류와 협력이 제도화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많은 아시아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다양한 NGO 경험들을 자원봉사 및 인턴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국에서 새로운 NGO를 만드는 경험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아직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은 거의 전무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차로 제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취업, 혼

인, 유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현지의 NGO들이 관계하고 있고 이러한 NGO들이 제도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북아 NGO들 간에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공동의 프로그램들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인프라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인터넷의 접속을 자유롭게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일국적 차원의 제도적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재정적 혹은 인적 지원과 교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초국적 제도의 변화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동북아 NGO 부문별 인프라 개선 방안

앞 장에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NGO 교류·협력 실태와 이를 지원해주는 인적, 재정적, 제도적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3국 NGO들의 국제교류의 형태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와 발전, 민주주의 발달,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협력의 규모와 방식, 혹은 대내/외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네트워킹의 양상도 상이하다. 천안문 사태의 주역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국의 NGO들은 국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국제연대 활동의 경우에는 아직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한국이나 일본 NGO를 비롯한 외국 단체들의 지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386 세대 중심의 한국 NGO들은 국내에서 축적된 활동 경험과 확보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연대 사업을 매우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편중된 시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대활동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지속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보투쟁 세대 중심의 일본 NGO들은 국내 활동의 역사도 길고, 연대활동의 경험과 노하우(know how)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어 3국 중 가장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연대와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국가들은 정치를 포함한 사회 각 영역에서 고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의 폭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교류는 비록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다른 영역의 교류에 비해 뒤쳐져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NGO의 교류 영역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성과도 과거 실적 위주의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성격을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형태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NGO들의 교류와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러한 NGO들의 교류와 협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정교한 메커니즘이 창출되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3국을 이해하고 각국의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공동의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함께, 혹은 각기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3국 NGO 활동가들의 국제연대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스로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NGO라는 조직에서의 활동은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여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활동가들의 노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일시적이고 감정의 지배를 받기 쉬우며, 체계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그들의 노력을 고무하고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제도적으로 국제협력 분야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NGO 활동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NGO의 특성상 NGO의 제도적 기반 구축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왜냐하면 NGO의 자율적, 자조적, 자립적, 비당파적 성격으로 인해 국가나 기업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전하고 비판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된다면, 그리고 정치 중립적 성격을 견지할 수 있다면 제도적 기반 확충은 NGO들의 국제 교류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활동가들의 자기 개발과 조직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거의 자원 활동 수준에서 근무하는 NGO 활동가들이 자비로 해외 출장을 가고, 자비로 국제회의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항상 운영비와 사업비를 걱정해야 하는 NGO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재정지원은 NGO의 국제 협력과 교류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NGO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도적 기반 조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에 접하게 된다. 역시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될 때, NGO들은 심적·도덕적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금원(fundraising source)의 다각화와 국내/외의 다양한 자원개발이 필요하다.

NGO가 아무리 교류·협력을 이상적으로 실현시켜 나간다고 해도, 정부와

기업의 존재양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국가는 국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기업은 이윤 추구, 혹은 이윤의 극대화를 꾀한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는 공공선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때론 다른 영역들과 충돌도 하고,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NGO는 직접 정치에 간여하거나 정책을 생산하지 못하지만,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와 기업에 대해 경우에 따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NGO의 요구나 대안들이 정부나 기업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겨난다. 그리고 안보와 국경 문제, 인권 문제, 역사 문제 등 민감하고 휘발성이 높은 주제들에 대해 정부 대신 시민사회가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NGO, 혹은 시민사회는 상호 긴장하는 비판적 관계이면서도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NGO의 특성과 한계를 인지한다면 동북아 NGO의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 그리고 한계도 분명해진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시민사회를 통한 국제적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 잠재력이 높지만, 중국과 같이 시민사회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보편적 가치 추구보다는 국익 추구에 집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각국 시민사회의 특성과 편차는 역시 이 지역에서의 NGO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장은 동북아 NGO의 교류협력 인프라를 인적, 재정적, 제도적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이에 기초해서 각각의 인프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1. 인적 인프라 개선 방안

가. 평가

동북아 NGO들은 주로 평화, 인권, 역사, 환경, 여성, 자치, 협동조합, 풀뿌리 정치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해왔다. 이 영역들은 한·중·일 3국 모두에게 현대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며, 또한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이슈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교류들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성공에 대한 기준과 지표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첫째, 지속성 여부, 둘째, 전문성 여부(참가자와 조직의 역량도 포함), 셋째, 사회적 파급효과와 영향력, 넷째, 정부의 정책에의 반영 여부, 다섯째,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진행과정, 여섯째, 제도적 뒷받침(재정문제도 포함)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류의 유형도 주로 한·일 NGO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NGO가 참여하거나 또는 GPPAC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도 함께 참여하여 구성된 것도 있었다. 그리고 교류·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참가자들 중심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외부의 지원, 즉 정부나 기업, 혹은 국제 기금 등의 지원이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아마 가장 성공적인 NGO 교류·협력의 사례로는 ‘미래를 여는 역사’가 아닐까 싶다.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평화 공존과 번영이라는 시민사회적 가치 추구, 주체들의 전문성,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 제도적 뒷받침, 진행과정에서의 상호 교화와 인식 증진, 나름대로의 구체적이고 뚜렷한 결과물, 수정과 보완을 위한 지속적 교류 등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공사례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정부나 사회가 이들의 주장과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형태와 시민사회의 성숙도,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교육 여건에 달려있다.

이 외에도 비교적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인 주체들의 역량과 안정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아쉬웠고, 또한 『아시아』와 같은 잡지의 발간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이 잡지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재정, 필진 섭외, 한/영 발간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 판매망 확보 등이 모두 주체의 역량으로 간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람직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NGO의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사회가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새로이 개척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비록 규모 면이나 안정성 면에서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NGO들의 창의성과 연대성이 돋보이는 것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개선 방안

앞서 지적한대로 NGO의 국제 교류·협력은 정부나 기업과 달리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시민사회적 가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추구하고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개별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상호 모순적인 경우가 많아 서로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고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 그들의 요구를 여론화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동시에 good governance를 통해 각 영역 사이에 건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첫째, 국제 협력·교류 NGO의 조직적 역량 강화와 둘째, 국제 연대 활동가들을 위한 개인의 전문성 강화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개인과 조직을 분리하여 인적 인프라 개선 방안을 논한다.

(1)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영역 확대와 지식 공유 강화

NGO들의 연대활동은 아직 개별 단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평화 의제가 중심인 GPPAC의 정례화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평화문제는 단순히 갈등과 군사력 충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빈곤과 환경, 사회 양극화, 성차별, 저발전 등에도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PPAC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이를 통해 평화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확장되었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해당 분야 NGO가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게 되면 과연 효과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이다. 그러므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지혜가 있어야 하며, 두번째로는 동일 분야 NGO들의 대표성 인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슈 통합적인 국제 교류에 모든 환경단체가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환경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환경 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앞 장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국제 교류와 협력 단체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구화의 확장과 함께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협력의 영역도 지구화, 환경, 평화, 여성, 인권, 역사 교육, 노동, 금융과 경제, 이민과 이주민, 주민자치, 일반교육, 소비자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영역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NGO들은 주로 권익 주창형(advocacy) NGO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제 협력 분야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NGO들이 바로 개발 NGO들이다. 빈곤퇴치, 저개발, 질병, 의료 지원, 긴급 구호, 교육과 훈련,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과 지원, 산림녹화 등의 영역에서, 그 나라의 정치나 사회 제도에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전통과 관습, 그리고 종교를 존중하면서 단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제 교류·협력 NGO들의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국제교류·협력 NGO들의 영역별, 주제별 분류

	국제 연대 NGO	연대와 개발 NGO	개발 NGO
관련 NGO	advocacy NGO 경실련, 참여연대, 역사교과서 단체, 민주노총, 대안연대회의 등	YMCA, 소비자 단체, 환경관련 단체, 여성단체, 이주민 관련 단체 등	복지관련 단체, 종교단체, 해원협 소속 단체, 대북 지원과 협력 단체 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역량강화 - 민주주의 실현 - 인권 증진 - 지구화(투기자본 감시) - 역사공동연구 -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권의 증진 - 어린이 노동 -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호 - 사회개발 - 식수와 음용수 개발 - 사회 인프라 구축 - 질병과 문맹 퇴치
활동지역	북한 등을 제외한 아시아 전역	동아시아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아시아 지역	일본을 제외한 북한을 포함한 전 아시아 지역
주요 협력 Part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관련 분야 NGO - UN을 포함한 국제기구 - 동북아 역사재단 - 평화재단 - 민주화기념 사업회 등 - 국가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기구 - 해당 분야 국제 network - 해외 partner NGO -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 국내 재단 - KOICA - 국내의 종교단체
사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초청 세미나와 회의 - 국제회의에서의 협력 - 다자간 협력체제 - 국내대학에 해당분야 활동가 초청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와 국외 활동으로 명확히 분류 - 상대방 국가의 사회 개발에 역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 관련 단체 중심 - 사업자금은 주로 국내 기금과 ODA 자금 - 해당 국가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야기되기도 함

이 도표의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협력 NGO의 활동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주체인 NGO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NGO들이 국제연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제 연대 활동과 교류·협력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도 있다. 또한 지구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촉진되면서 국제회의와 활동들이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참여 NGO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영역과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전달과 지식 공유,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환경정보센터와 같이 NGO가 공동으로 국제협력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 활동가들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 노력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의제와 이슈가 확장되며, 사업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가들의 능력과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국제연대 활동을 위한 NGO 활동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보다 자기 업무 분야의 지식을 포함한 전문성이라 하겠다. 이 전문성에는 지식과 정보, 사업 수행 능력, 사업에 필요한 협력자 선택, 자금 마련과 사업 방법, 내/외부 전문가 영입 등을 포함한 효과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방법과 자원을 구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 NGO들은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국내 NGO들의 국제 연대활동이 투입된 자원에 비해 도출되는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런 유능한 활동가를 충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렇게 훈련된 활동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열악한 한국 NGO 현실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훈련받은 전문가들은 NGO 보다 이미 기업이나 정부 영역, 혹은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의 국제 연대 관련 NGO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직업적 전망과 함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국가나 기업 영역에서 훨씬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NGO 영역에서도 이들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와 기업과의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NGO 활동가들 중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을 전문가로 육성하는 방법이다. 국제연대 분야에서 사업을 담당했던 활동가들을 일정 기간 동안 교육/훈련시켜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재개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많은 NGO의 국제 연대 관련 활동가들은 사실 이러한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가장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세번째로는 경력자들이 국제 연대 NGO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최근

에 이런 활동가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들은 대개 정부나 기업, 혹은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이들로 국제 NGO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경험은 열악한 조건하에 있는 국제 연대 NGO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외부 국제 연대 분야의 전문가가 자원 활동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사실 한국의 국제 연대 NGO들은 지금까지 이들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들은 대개 학자나 연구자들로써 NGO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한 이들이다. 그러나 국제 연대 영역의 세분화와 심화, 그리고 전문성 등으로 이들의 기여도는 점차 축소되고 있고, 이들 외부전문가들도 NGO외에 자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나 기업에서 활동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구화로 인해 NGO 활동도 국제적으로 보다 광범위해졌고, 전문성도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NGO들이 국제 레짐이나 거버넌스에 주요 주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성도 과거에 비해 훨씬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NGO의 전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재고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전문성 확보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활동가들의 육성과 훈련, 영입, 네트워킹 등은 국제 연대 관련 NGO의 핵심 관심사라 하겠다.

(3) 언어 구사 능력

지구화가 확대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국제 통용어로서 영어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아시아 NGO의 국제회합에서도 영어가 중국어나 일본어를 제치고 통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 연대 분야의 활동가들에게는 영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영어 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절대적이다. 이는 영어 습득을 위해 활동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가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1999년부터 사설 언어기관에서 수업료를 대폭 할인하여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나 현재는 이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는 활동가들이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국내 주요 NGO들의 국제담당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1999년부터 실시해 왔으나 이 또한

NGO들의 호응과 외교통상부의 내부사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재개함과 동시에, 참가 폭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대학에서 이들을 위한 언어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단들이 지원한다거나, 정부의 특별 기금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슈별, 영역별로 국제회의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화된 언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4) 직업적 전망

NGO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와 함께 더욱 많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현실적인 대우와 직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것이다. 물론 21세기의 직업 시장은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게 보장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2, 3가지 이상의 직업이나 직장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NGO들은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첫째, NGO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NGO들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과다하게 발달해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들과의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NGO 활동가들과 기업, 정부의 전문가들의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기업과 정부의 전문가들이 NGO 활동을 할 수 있고, 반대로 NGO 활동가들이 기업이나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NGO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NGO들은 비판과 견제 기능은 매우 발달해 있는데 비해 자문과 정책 제안, 그리고 개발 방법론과 설계 분야는 매우 취약하다. 물론 이런 취약점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로 보완되지만, 특히 개발 NGO의 경우 이런 기초적인

사업을 전개할 역량이 뒤쳐져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 협력 분야에 근무하는 NGO 활동가들이 다른 영역으로 이직할 때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서 지속적 활동을 원할 경우, 자기 개발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직도 이들을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른 시간적 여유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재정적 인프라 개선 방안

가. 평가

재정 인프라 구축은 NGO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제 교류를 위한 회의를 조직하거나, 국외의 현지 방문이나 회의를 참석할 때, 그리고 국제협력을 수행할 경우에도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교류·협력의 기회가 상실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국제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국가들은 대개 선진국들이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도 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도 재단을 설립하여 NGO들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분야의 사업을 과거에 비해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동북아 NGO들의 교류가 확대·심화되면서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서구의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은 초보적 단계이지만 최근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NGO의 국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재단, 위원회, 기금 등이 있으며, 지원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행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기금으로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NGO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부의 8개 지원 분야 중에 국제 교류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그 외의 사업에서도 아무 장애없이 국제교류 부분을 첨가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를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KOICA와 같이 국제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만을 지원하기도 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동북아 지역에 국한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민주화기념사업회는 동북아를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들을 초청하여 국제회의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

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역시 이 지역의 NGO들을 초청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청암재단과 같은 기업의 재단들도 해외 NGO 초청 사업을 하거나 국내 NGO 활동가들에게 장학금의 형태로 외국에 파견·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끝으로 민간 차원의 재단들은 국내 NGO 활동가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공정무역(fair trade) 등을 통해 국외까지 확대된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NGO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을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 재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의 폭이 확대되면서 UN 산하 기관과 같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조직과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NGO와 함께 새롭게 지구적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NGO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가장 흔한 예가 지방의제 21과 관련된 행사와 사업에 광역자치단체가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주화기념사업회, 동북아역사재단 등과 같은 정부 기구는 출범시점부터 다분히 민관의 거버넌스 형태였으며, 이 기구들에 NGO의 참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 기구들도 대개 2000년 이후 출범했으며, 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정부 위원회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위원회들은 자체적으로 국제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해외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대표단의 일원으로 NGO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석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동북아가 주체인 NGO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액수가 매우 부족하고 지원자들에 비해 선정된 활동가들은 극히 적은 인원에 불과하다. 과거에 비해 지원 기관도 훨씬 많이 증가했고, 지원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 속도보다 NGO의 국제 사업이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사업 주체들도 늘고 있다. 2006년 국제 협력 NGO들의 협의체인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원 단체가 36개였으나 불과 일 년 후인 2007년에는 50개로 늘어났다. 여기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그리고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환경단체들도 이제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곧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재정 인프라는 아직 NGO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하겠다.

나. 개선 방안

(1) 정부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국제 교류·협력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즉 교류와 협력이 국제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안인지, 혹은 국제회의와 잡지 발간 등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서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중복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위원회와 재단 등의 재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이 추진하는 고유한 사업에 NGO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2006년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전체 GNI의 0.06%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장기적인 공적개발원조 로드맵에 의하면 2010년까지 0.15%까지 증액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연도인 2015년에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적어도 0.2%까지 증액하여 한국이 OECD의 DAC 기구에 가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6, 7억 달러 수준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이 적어도 30~40억 달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 걸음마 수준의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현재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만 한다. 또한 현재 거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NGO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NGO들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재정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의 NGO들도 공적개발원조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기업의 재단

현재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operate social response, CSR)’이나 기업의 사회 공헌, 환경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다양한 형태로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개 재단을 설립하여 여러 형태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사회 복지와 장학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NGO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동북아지역에 국한된 NGO의 확대되고 전문화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을 증액시켜야 하며, 둘째,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도 중요할 것이다. 이 전문성에는 언어(영어와 현지어)와 사업 수행 능력도 포함된다. 셋째,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화 사업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개발과 빈곤, 질병 퇴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에 재단이 직접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NGO들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거버넌스의 확립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NGO 전문가들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계획과 수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NGO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이들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민간재단

NGO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재단도 이제 상당히 많은 수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개인의 이름을 딴 수많은 사설 재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 재단들에 의해 국내/외의 수많은 NGO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지극히 초라한 상황이라 하겠다.

한국의 민간재단들은 그 운용 분야가 재단의 명칭과 설립목적에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권재단, 시민운동지원기금, 아름다운 재단, 여성재단, 환경재단 등이 바로 그러하다. 문제는 예를 들어 인권 재단이 모든 한국의 인권 NGO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시민운동지원기금은 다양한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거나 현실적으로는 매년 10여개 정도의 시민단체에 1천만 원 이하의 액수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지원 규모가 아니라 지원 방향과 지원 내용에 있다. 이런 재단들은 대개 큰 단체와 명망가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택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재단들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기존의 지원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큰 단체

들이 지원금을 독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작은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나마 이러한 지원이 주로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의 대표성을 갖는 명칭을 사용하는 재단들은 그에 걸맞게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역량이 있어야 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인 재단들이 훨씬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에도 재단들이 설립되어 지방의 NGO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중심의 혈연주의가 아무리 끈끈하게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전근대적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점차 쇠퇴해 가고 있으며, 대신 시민사회적 가치관과 사회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서구와 유사하게 개인의 재산을 가족을 통해 재생산하기 보다는 공적 영역으로 환원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며 현재보다 더욱 많고 다양한 형태의 개인 재단들이 설립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4) 동북아 시민사회교류 기금 설치

동북아 차원에서의 시민사회 교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는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복잡성, 사회적 유사성과 비동시성, 경제적 역동성과 보완성, 지리적 접근성, 정치적 불안과 차별성, 그리고 군사적 불안과 불균형 등으로 인해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 내의 시민사회적 가치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정부 간 교류만으로, 혹은 시장의 팽창과 확대만으로 역내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실현시킬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상호 공존을 실현시키고 편협한 국익의 극복을 통한 동북아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확장과 발전은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다만 동북아의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NGO 사이의 국제 교류와 협력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내 NGO 사이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금의 설립을 통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 교류 기금의 설립은 1996년에 발족한 ASEM 회의에서 유사

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ASEM은 발족과 함께 ASEF라는 ASEM 회원국들의 개인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기금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 ASEM 의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차원에서 이런 기금의 설립도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3. 제도적 인프라 개선 방안

가. 평가

NGO의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기업 외에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국가 간 국제회의에도 반드시 NGO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제 NGO들은 지구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안에 따라 정부 대표와 동등하게 인정받는 중요한 지구적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NGO들의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동유럽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국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NGO의 육성을 위해 각종 사회적 혜택은 물론 국가 예산의 1~2%를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NGO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역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듯이 NGO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규제 대신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은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1999년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을 제정하여 NGO/NPO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NGO들이 그들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국은 국제 NGO들의 지부를 제외하면 자생적 NGO 조직이 아직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중국의 NGO들은 그 태생적 한계와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매우 긴밀한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NGO에 대한 개념과 규정도 다르고, 동시에 이러한 NGO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런 제도적 인프라의 확장과 보완이 NGO의 속성인 창의성, 도덕성, 투명성, 자발성, 유연성, 독립성, 비당파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진솔한 고민과 성찰적 비판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NGO의 국제 교류·협력 활동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장과 멀어지고 직업의 안정성은 NGO의 특성을 약화시키고,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도 한국의 많은 NGO들은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다 보니 NGO들은 회원 모집과 회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상적인 공존 형태는 상호 견제와 비판이 상존하는, 긴장 강도가 높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하겠다.⁶⁸

NGO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는 최근 상당한 정도로 확충되고 있으나 현실과 조응하지 못하는 제도는 오히려 NGO의 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도적 기반이 완벽하게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NGO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기반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반대의 경우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불가능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완벽한 이상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외부환경과 그 사회의 조건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제도적 인프라도 견제와 비판이 전제된 협력적 관계의 형성이 그 핵심일 것이다.

나. 개선 방안

(1) 거버넌스 구조 개선

거버넌스는 과거 정부에 의해 독점되었던 정책과정에 대해 다른 사회 영역의 주체들과 계획과 결정, 집행과 평가 기능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의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실패, 한국의 경우에는 억압적 권위주의의 해체, 중국의 경우에는 일당 독재의 권력을 독점했던 공산당 정부가 자본주

⁶⁸ 투명한 관계는 상호 신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code of conduct와 같은 윤리 강령을 도입하여 NGO의 재정적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사회 영역의 주체들의 NGO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를 적극 수용하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일본의 경우는 복지국가 실패 이후 등 전 세계적으로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거버넌스의 특징은 행정부가 권력 분산을 통해 첫째, 다른 사회 주체들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고, 둘째,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셋째, 다른 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또한 넷째는 거버넌스를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탈권위적인 통치체제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다섯째, 다른 사회 주체들에게 통치와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라 하겠다. 끝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신속한 정책 결정이 불가능하며 둘째, 거버넌스 파트너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정책 실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긴급 상황이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그다지 적합한 통치체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성립 조건으로는 첫째, 상호 신뢰, 둘째, 전문성, 셋째,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필수이며, 넷째, 사회 전반에 확산된 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거버넌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으며, 중국에서는 민간부분, 혹은 제3섹터에 속한 민간 거버넌스 참여 주체가 정부로부터 공정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보완적, 혹은 부수적 파트너 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의한 통치, 중국어로는 치리(治理)는 정부의 불안한 권력과 통치를 보완해 주는, 혹은 정치적 불안이나 정책적 실패를 보완해 주는 정권의 보호막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에서 거버넌스 원리에 입각하여 NGO 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제도가 도입된 배경도 국가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현재 한·중·일 3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버넌스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 부분에 민간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걸맞은 NGO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민간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제 교류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권리의 요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관한 행사에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확보된 평가집단이 참관하여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단체들에게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외에도 중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이들의 행사에 참관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이외에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통해 행사보다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과 행사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행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과 사회적 연관성을 갖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쌍방과 다자간 협력 구조개선

지금까지 동북아 차원에서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은 대개 이해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이는 그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행사들이 의미있게 진행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제3의 조직이나 기구가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해당 분야의 (지방)정부 부처나 관련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참여자들 사이에 신뢰가 결여되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권위가 있는 제3의 기구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회를 거듭한 후 어느 정도 활동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한 이후 이러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가국 수의 확대도 필요하다. 물론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도 있겠지만 다수의 참여가 가능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점차 다른 나라의 NGO들의 참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일시민사회 포럼의 경우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의 NGO들만이 참가했으나 3회부터는 중국 NGO들이 참석하기 시작했다. 다만 올 10월에 개최된 한·일시민사회포럼에는 재정문

제와 준비 부족으로 인해 중국 측의 참가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에 아시아 국가들만 참석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의 유사기관들의 참석을 유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일 시민사회 포럼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독일 정당관련 재단들의 참석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첫째, 그들의 경험이 한·일 양국 시민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둘째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국가주도의 재단 및 기구: 민주화 기념 사업회, 동북아 역사재단, PCSD,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 위원회 등

이러한 재단이나 위원회는 그간 NGO의 활동과 사업을 국가가 계승·발전시킨 경우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과거사 청산, 국가 부패를 방지,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모두 NGO들에 의해서였다. 어찌 보면 NGO들의 주장과 요구를 국가가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이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단체들은 국제교류 협력 사업도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국제회의나 방문, 초청, 지원 등의 방식으로 NGO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만하게 진행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던 NGO 활동가들이 대거 이직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NGO 활동가들에게는 안정된 직장에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음으로 매우 귀중한 기회를 얻는 셈이지만, 조직과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전문 활동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결국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부조직들이 시민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정부조직이 NGO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조직들이 NGO의 활동영역을 침범해서 막강한 자원을 동원하여 사업을 독점하려 한다면 모두가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방식이나 자원 동원 형식, 그리고 사업 추진 방법 등에서 국가 조직과 NGO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조직이 NGO의 과제를 전적으로 흡수하여

독점하게 된다면, NGO의 독창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지 못한 국가조직은 활동의 성과를 얻기 힘들고 반대로 국가가 갖는 전문성이나 자원의 도움 없이 NGO가 단독으로 과제를 수행한다면 이것 또한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상호 경쟁적 관계보다 보완적인 관계로의 공존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대학의 교류와 훈련 프로그램

현재 한국에는 NGO와 관련된 과정이 성공회대, 경희대, 아주대, 한·일장신대, 서강대, 강원대, 경북대를 비롯한 서울과 지방 대학들에 개설·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관련 강좌들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 대학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 중심의 강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세계의 석학들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전망하면서 아시아 관련 강좌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화려한 부상과 일본의 회복, 인도의 급속한 발전, 중동 지역의 석유 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아시아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여 각 대학에 아시아 관련 학과와 연구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아시아 지역학에 관심을 갖고 강좌를 개설한다거나, 경쟁적으로 아시아 출신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국제 교류·협력 NGO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지역 전문가들이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NGO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고, 현지 출신 학생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NGO들은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상호 정보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고, 아직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은 NGO 활동가를 양성하는 주요 기관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국제 교류·협력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NGO 활동가들은 대학의 해당 학과나 과정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할 필요

가 있다. 그래야만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대학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 재단들은 활동가들에게 재충전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액수의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들도 NGO 활동가들에 대해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전액 혹은 일부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이런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 출신 학생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지 학생들은 이를 통해 한국의 NGO 및 활동가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갖게 되어 한국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상호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원활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속성은 교류 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해당 분야 NGO 활동가들은 현지 출신 학생들로부터 정확한 현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 파견되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어 외에도 현지어 구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대민 접촉이 잦은 사업일수록 현지어의 구사 능력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NGO들은 현지 통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이는 부정확한 통역, 현지인의 사고방식과 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 이로 인한 오해와 불신 등으로 그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현지어 구사 능력은 현장 중심 사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5)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조: UNEP, UNDP, ESCAP, ASEM

한국의 NGO들은 아직 UNEP나 UNDP와 같은 UN 산하 기구들과의 협력관계가 그리 긴밀하지 않다. 그런 반면 UN 산하 기관들이 주관하는 NGO와 시민사회 관련 행사는 매우 잦다. 물론 사업의 성격상 민간조직의 활동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UN 산하기구들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역사청산이나 인권 문제, 혹은 정치체제와 연관된 국제 회의에 UN을 비롯한 여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와 기상이변 완화와 같은 환경 이슈, 여성, 빈곤

과 AIDS와 같은 질병 퇴치, 시민사회의 권능강화(empowerment) 등의 주제와 관련된 국제교류·협력 행사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이유로 이 분야의 국제기구들에는 조직은 물론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의 조언과 전문성을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제적인 홍보가 가능하다. 두번째로는 이해가 상충되는 이해 당사자들이나 적대적인 주체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개입을 원하는 예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또한 UNESCAP이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 포럼은, UN 산하 기구가 주관한 회의에 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하여 아태지역의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아시아 지역에 산재한 문제들, 예를 들면 민족 간 갈등과 난민문제, 소수자의 인권 침해, 여성 지위 향상,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 즉 아태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정치적 이해와 체제 경쟁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과 대만의 NGO 대표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 만나 대화를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WSSD, UNCED, WSF, WEF 등 수많은 국제회의가 동북아시아를 관통하는 cross sectoral issues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들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혹은 간여하는 국제회의와 프로젝트에 동북아시아의 NGO들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ASEM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정상회담으로 참가국은 EU 회원국 ASEAN + 3이다. 매 2년 마다 아시아와 유럽 회원국에서 번갈아 열리며 2000년의 3회 포럼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공식적인 ASEM 회원국의 정상 회담과 함께 회원국 시민사회의 모임이 별도로 개최되는데, 한국에서 열린 회원국 시민사회 모임에는 300여 명의 NGO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NGO 활동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NGO들의 활동 성과와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이전까지 한국의 NGO 사업 영역에서 국제 교류 비중은 매우 작았다. 서로 잘 모르고 있었고 관심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ASEM 2000을 경험하면서 다른 외국의 NGO들도 마찬가지로지만 특히 동남아 NGO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다. 또한

한국의 NGO들도 IMF를 거쳐 지구화와 신자유주의를 경험하면서 지구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ASEM 2000은 상호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촉발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NGO 대회는 비용과 결과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여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고, 그에 비해 더 긴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동시에 운영비도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회의의 사회적 영향은 소규모 회의에 비해 매우 크며,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여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소규모 국제회의와 대규모 국제대회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앞에서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를 인적, 재정적, 제도적 인프라로 나눠서 현황을 살펴보고, 각 부문별 인프라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 부문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전에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프라가 상당히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의 인구, 면적, 경제 규모 등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살펴본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는 그야말로 보잘 것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인프라는 개별 국가 차원의 인프라이지 동북아 지역 차원의 인프라는 아닌 것이다. 또한 개별 국가의 인프라도 이제 만들어진지 불과 3~7년에 불과한 것이다.

동북아 지역 차원의 인프라가 취약하듯이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활동도 아직 초기 단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몇몇 NGO의 힘만으로 지역 차원의 NGO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동북아에서 국가별 NGO들의 연례회의 정도를 넘어선 상설 조직체 수준의 네트워크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와 NGO 네트워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이다.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NGO 네트워크도 잘 운영될 것이고, 반대로 NGO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되면 이에 따라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도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도, NGO 네트워크도 별로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 인프라와의 관계 속에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기본 방향

가. 동북아 지역체제의 형성을 목표

동북아 지역체제와 NGO 네트워크의 발전은 상호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체제가 발전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NGO 네트워크도 발전하게 될 것이며, NGO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지역의제를 갖고 활동하게 되면 지역

체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유럽은 일단 EU라는 유럽 공동체의 존재로 인해서 어느 대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정치·경제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편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NGO들의 네트워크 구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이한 것 같다. 이를 테면 동북아 지역의 경우는 정치·경제 공동체 영역에서의 담합이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을 NGO 네트워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 하는 반면, 유럽은 이와 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정치·경제 공동체적 인식 위에서 좀 더 수월하게 공익적 측면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NGO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지역 NGO 네트워크의 대부분은 유럽연합 및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일하고 있으며, 오히려 개개 정부와 접촉하는 일은 거의 드문 편이다.⁶⁹

그동안 동북아에서 NGO 네트워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동북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체제의 형성이 더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수준의 지역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인권, 환경, 개발 등의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그와 관련한 지역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한 기구들이 존재하기만 해도 동북아에서의 NGO 활동은 지금과는 질을 달리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을 것이다.

또한 NGO들이 관심을 갖는 의제들도 개별 국가 차원, 동북아 지역 차원, 지구적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으로 바로 연결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동북아 지역 차원이 바로 의제와 활동 모두에서 개별 국가 차원과 지구적 차원을 원활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체제의 형성을 전망하는 것 속에서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 의제별로 정부 간 협력이 용이한 것이 있고 매우 힘든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동북아인권체제보다는 동북아환경협력체제나 동북아개발협력체제의 형성에 대해 동북아 각국 정부가

69_배진수·강성호·김영경,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동북아 지역 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pp. 272-274.

훨씬 더 관심을 가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보다 용이한 분야부터 지역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발전을 위한 한국의 주도성 발휘

동북아 각 국의 시민사회 발전의 정도가 다르듯이 NGO 교류협력 인프라의 발전에도 많은 편차가 보이고 있다. 한·중·일의 NGO가 참여하는 동북아 국제회의의 경우를 보면 아직도 중국은 참가비용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의 주최 측에서는 중국 NGO의 참가를 위해 별도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 NGO들도 국제회의의 참가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 NGO는 경제대국의 NGO에 걸맞게 상대적으로 참가비용을 용이하게 조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NGO의 경우에는 개별 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 경비 마련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편이다.⁷⁰

앞서 살펴 보았듯이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와 관련해서 중국은 아직 이렇다 할만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교류협력 인프라 구축에 상대적으로 협력적인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특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동북아를 자신의 국가가 소속된 지역으로 인식하는 관념이 매우 약한데, 중국에게 동북아는 지역(region)보다 지방(local)적 의미가 보다 강하다. 또한 일본은 1990년대 말까지 ‘동아시아’ 이외에는 자신들이 소속된 지역을 나타내는 말과 개념이 모두 없었다고 한다.⁷¹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매우 오랫동안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동북아와 동남아를 합한 지역으로서

70- 일례로 2005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GPPAC 동북아회의에 참석한 한국 여성 참가자들은 여성재단으로부터 경비 일부를 보조받았고, 2007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동북아 ODA 회의 참가자들도 연대기구인인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로부터 항공료를 지원받았다.

71-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서울: 일조각, 2004), p. 75.

의 동아시아를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동북아에서 한·중·일 사이의 경쟁보다는 협력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것이 한국이다. 세계적 군사문제 연구기구인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07년 군비 군축 및 국제안보 연감’에 따르면 한국이 지출한 군사비는 219억 달러(1인당 지출액 455달러)로 세계 11위인 반면에, 중국은 495억 달러(1인당 지출액 37달러)로 세계 4위, 일본은 437억 달러(1인당 지출액 341달러)로 세계 5위이다.⁷² 한국의 군사비는 중국,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1인당 지출액은 중국의 12배나 되는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보다는 공동안보체제 형성에 한국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이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주변 국가의 협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동북아 지역질서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선 한·중·일 시민사회 중 한국의 시민사회가 매우 역동적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동북아 시민사회의 발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재 한·중·일의 시민사회 발전 정도나 내부 역량, 동북아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이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입장에서 한국이 헤게모니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북아의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내 NGO들이 동북아 교류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국내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사례들이 중국, 일본의 국내 인프라 개선의 모델로 전파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GO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 인프라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중국과 일본에 공동 사업으로 제안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한·일 포럼, 한·일

72- 『동아일보』, 2007년 6월 13일.

공동역사기구 등 정부 간 합의로 진행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NGO 교류협력 인프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⁷³

다. 일회성 행사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시행

동북아에서 NGO 교류협력 활동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재정 문제이다. 사실상 동북아 NGO 네트워크가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몇 차례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NGO 교류협력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 NGO 네트워크들은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NGO 지원 기금, 민간 재단의 지원금, 기업 후원금 등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정부나 민간재단, 기업 모두 NGO 교류협력 활동에 대해서는 일회적 지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3년까지 가능하지만 개별 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을 넘어서서 연대기구의 국제교류 사업을 신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개별 단체들 사이에도 경쟁이 치열한데 연대기구가 지원금을 받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운 것이다.

동북아에서 NGO 교류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동북아 NGO 네트워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북아 NGO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재정이 회원 단체의 회비로 충당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꿈과 같은 일이다. 대부분의 회원 단체들이 규모가 매우 작는데 명목상 이상으로 회비를 징수하기는 어렵다. 동북아 NGO 네트워크가 나름대로 재정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체제가 형성되어서 동북아 공동기구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때일 것이다.

73_ 한·일 포럼은 1993년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교류센터 공동 주관으로 매년 두 나라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또한 공동역사연구기구는 한·일 간에는 2001년 10월의 정상회담, 중·일 간에는 2006년 10월의 정상회담에서 구성키로 합의하여 진행되었다.

결국 동북아 NGO 네트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개별 국가의 정부나 재단,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동북아 NGO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관은 최소한 10년 정도의 전망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NGO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재단, 기업의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2. 세부 추진방안

가. 분야별 동북아 지역체제 발전계획 수립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각 국가 간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상이점이 분명하여 회원국 간 이해 조정과 공동이익의 추구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분야별 지역체제라고 할 때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정치, 경제, 평화(안보), 환경, 인권체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발전한 지역공동체인 유럽 연합은 정치, 경제적인 지역체제를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동북아에서는 하위 지역체제라고 할 수 있는 평화(안보), 환경, 인권 등에서도 별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냉전 종식 이후 아세안 지역포럼,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아시아안보대화(Shangri-La Dialogue) 등 아-태지역을 범위로 하는 대지역 안보협력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동북아 지역을 범위로 하는 소지역 차원에서의 안보 협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⁷⁴

먼저 동북아 국가들 간의 지역협력은 아니더라도 ASEAN과 연계된 형태로 지역협력이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 1976년에 ASEAN 국가들은 ASEAN 협정을 선언하여, 회원국들이 평화, 자유, 중립 지대의 조기 설립을 주장하고, 상호내정 불간섭, 국가 간 갈등 중재와 갈등 해소 조치 권고를 위해서

74_최의철·홍관희·김수암,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98.

장관급 심의회의 창설을 제안하였고,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미얀마와 라오스(1997) 및 캄보디아(1999)가 가입하여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ASEAN의 우산 아래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8년부터 ASEAN 10개국에 한국, 일본, 중국이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n Vision Group)을 형성하였다. 2001에 동아시아비전그룹은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 평화, 번영, 진보의 지역』(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EU의 아시아관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6개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경제협력, 재정협력, 정치와 안보협력, 환경협력, 사회와 문화협력 및 제도 간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⁷⁵

동북아에서 평화(안보) 분야의 협력활동으로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가 있다. 동북아협력대화는 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샌디에고 소재) 산하 세계 갈등 및 협력연구소(IGCC: Institute of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가 주도, 한국을 비롯하여 미·일·중·러·북한이 참가하는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정부간 대화협의체이다.⁷⁶ 동북아협력대화는 정부인사 참여로 인한 국가 간 상호이해, 신뢰 구축, 협력 증진에 공헌을 하였고, 동북아 국가 간 대화습관(habit of dialogue) 축적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회의의 결정사항이 정부에 전달되지 않거나 참여자간의 논의에 그쳐 회의가 실행력 없는 단순한 대화의 장(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⁷⁷

75-“이 보고서 작성자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의 설립을 주장하고, 참여국들의 발전 증진과 기술 협력, 지역 지적 기반 경제 실현,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기구의 설립, 국가 경영문제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협력, 국제문제에 대한 동아시아 발언권 강화, 지역과 지구적 차원에서 다자적 환경문제 협력 제도화, 빈곤추방 계획 수립,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계획 채택, 기술 교육, 기술 훈련 및 법인설립 등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인간자원 발전 계획의 집행, 지역 정체성과 의식 증진 및 동아시아 예술과 문화의 증진과 보존 계획에 대한 협력 등을 강조하였다.” 위의 책, p. 99.

76-“북한은 준비회의(1993. 7)에 참석한 이후 본 회의에는 계속 불참하다가 2002년부터 참석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는 참가국별로 외교부 및 국방부 관리 2~3명(개인 자격)과 학자 2명으로 구성되며 회의 개최는 8~10개월 간격으로 동북아 5개국을 순회하며 이루어져 2004년까지 모두 15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김기정·이서향·최강,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추진방안』(동북아시아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5년 4월), pp. 50-51.

환경 분야는 상대적으로 동북아 차원에서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인데, 한국 주도의 다자간 환경협력회의를 중심으로 환경협력의 제도화가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는 동북아 6개국(한, 중, 일, 몽골, 러시아, 북한)과 국제기구(ESCAP, UNDP, UNEP, ADB, World Bank)가 참여하는 정부 간 회의체로 1993년 2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2005년 10월 <한국 서울 회의>까지 11차례 개최되었다. 또한 1999년부터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는데, 동북아 환경협력 최고 협의체로서 실질적 협력사업의 수행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주요추진사업으로는 환경교육 네트워크 사업,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 장거리 이동성 대기오염 공동연구, 중국서부 생태계 복원사업, 황사, 산성비, 황해오염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협력방안의 도출 등이다.

반면에 인권 분야는 동북아에서 아직 협력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부 간 차원의 인권협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다. 1990년대 유엔인권위원회가 시작한 ‘유엔 아태지역 인권워크숍’(The United Nations Workshop for the Asia-Pacific Region on Human Rights Issues)이 모태가 되어서, 1996년에 국가인권기구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관포럼(APF: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이 결성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⁷⁸ 이 포럼은 유엔총회에서 서명된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규정된 근본기준에 따라 설립된 독립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포럼 회의에는 정부, 유엔기구, 인권 NGO에 옵저버 자격을 주고 있는데, 동북아에서는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인권문제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동북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체제가 발전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분야별로도 그 발전 정도가 상이하다. 또한 각 분야의 지역체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된 적이 없다. 동북아에

77- 위의 책, p. 51.

78- 김병로, “동북아 인권 NGO의 실태와 협력 동향,” 통일연구원 편, 『동북아 NGO 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311-312.

서는 정부와 NGO 모두 지역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야별 동북아 지역체제의 전망과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에선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는 말이 있듯이, 동북아 지역 의제와 관련해서 매우 바쁘게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동북아 지역체제 형성 과정에서는 소외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동북아 지역체제 형성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1990년대는 지구적 차원에서 NGO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와 NGO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제제도로 대표적인 것이 ‘대인지뢰금지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이다.

1992년 10월에 결성된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은 지구적 조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전형적인 예로, 대인지뢰(anti-personnel mines) 금지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전 세계 60여 개 국가의 1,000개 이상의 NGO가 모인 네트워크 조직이다. 최초의 창설자로는 Handicap International of France, Human Rights Watch, Medico International of Germany, Physicians for Human Rights(USA), the Vietnam Veterans of America Foundation 등이 있으며, 1997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⁷⁹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NGO 연합’(CICC: the NGO Coalition for an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1995년에 설립되어서 현재 2,000개 이상의 시민사회 조직과 법률 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Lawyers

⁷⁹- 오늘날 국제지뢰금지운동에는 인도지원, 난민, 의료구조, 인권, 개발, 무기 통제, 평화, 교회, 노조, 전문가 협회 등 엄청나게 다양한 집단과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지뢰금지운동은 느슨하게 조직된 비체계적인 네트워크로 남아 있으며, 단지 소수의 상근 활동가들만으로 팩스, 인터넷과 정기적인 회의로 상호 연결된 광범위한 회원 조직들의 자원을 끌어 모은다. Maxwell A. Cameron, "Global civil society and the Ottawa process: Lessons from the movement to ban anti-personnel mines," Andrew F. Cooper, John English, and Ramesh Thakur ed., *Enhancing global governance: Towards a new diplomacy?* (Tokyo·New York·Pari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2), pp. 75-76.

Committee for Human Rights, World Federalist Movement - Institute for Global Policy(WFM-IGP) 등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직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협약이 채택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⁸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인지뢰금지협약 체결,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등에서 스칸디나비아국가, 캐나다 등의 정부가 NGO들과 함께 국제적 여론을 주도하면서 앞장섰다는 점이다. 만약 이들 국가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NGO들과 협력하지 않았다면 이들 국제제도의 도입은 많이 지체되었거나, 현재의 제도보다 실효성이 적거나, 또는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되었을 가능성이 컸었다.

지역체제나 국제제도를 새로이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 간 협의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한계가 뚜렷하다. 각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국익이라는 배타적인 영역을 설정하며 결정과정의 복잡하고 더디기 때문이다. 반면에 NGO들은 국가들 사이의 쟁점에 대해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고, 각국 정부들이 보다 신축적으로 행동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론의 조성 또는 압박을 할 수 있다.

동북아의 분야별 지역체제를 정치, 경제, 평화(안보), 환경, 인권체제로 구분해 보면, 정치 분야는 NGO들보다는 각국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크며, 경제 분야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클 것이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NGO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평화, 환경, 인권 분야에서의 NGO 역할은 매우 커다랗다. 그런데 평화, 환경, 인권 분야에서의 지역체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지역체제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체제 형성에서 NGO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위 지역체제라고 할 수 있는 평화, 환경, 인권 분야에서 정부와 NGO의 협력이 중요한데, 이들 분야에서 정부와 NGO의 주체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정부의 경우 각 부처들이 해당 분야를 담당하지만, 상대적으로 NGO와의 협의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정부 산하 위원회가 훨씬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 분야에서는 동북아시대위원회, 환경 분야에서

⁸⁰-<<http://www.iccnw.org/documents/FS-CICC-AboutCICC.pdf>>.

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권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NGO의 협의 모임도 이미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평화 NGO들은 GPPAC(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 한국위원회⁸¹를 구성하여 지난 2004년부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환경 분야에서는 1994년부터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로 구성되어 활동해 온 한국환경회의⁸²가 있으며, 인권 분야에서도 인권단체연석회의⁸³라는 연대기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측 기구들은 그동안 NGO들과의 협력을 주로 국내 문제에 한정해서 대화를 해왔고,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는

81_ GPPAC 한국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는 개척자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평화시민연대/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한국아나뵃티스트센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비폭력평화물결/참여연대/동북아평화연대/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통일교육문화원 등이다.

82_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94년 환경사안의 공동연대와 단체의 상호협력력을 위해 구성되었다. 그동안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오다 2005년 한국환경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여 활동하고 있다. 각각의 환경단체가 스스로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집중하여 활동하는 한편, 전국적인 환경사안이나 대규모 환경과피 사업 등에 대한 환경운동 진영 전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환경회의는 전국의 단체가 소통할 수 있도록 역할하고 있는 상시적인 연대기구이다. 또 한 지구의 날 행사,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 등 환경운동 진영 전체가 함께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며 환경운동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공주녹색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그린혜미리운동연합/기독교환경운동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미래/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색연합/대구경북녹색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한YWCA연합회/부산녹색연합/분당환경시민의모임/불교환경연대/생명의숲/생태보전시민모임/설악녹색연합/시민모임 두레(두레생태기행)/소비자시민모임/수원환경운동센터/여성환경연대/에코붓다/원불교천지보존회/원주녹색연합/인드라마생명공동체/인천녹색연합/전국귀농운동본부/제주참여환경연대/꽃꽃세상을위한모임/천주교환경문화원/한국YMCA전국연맹/한국자원재생활용연합회/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UNEP한국위원회 등 전국 39개의 환경단체가 소속해 있다.

83_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거창평화인권예술퉈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전국 37개 인권단체가 가입한 연대기구이다.

것을 선호해왔다. 정부는 아직 NGO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등을 통해 간접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제협력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따로 있고, 모든 부분에서 정부가 주도성을 갖고 전면에 나서려고 하면 민관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이제는 각 분야별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지역체제 형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분야를 넘어서서 평화, 환경, 인권 분야를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체제 형성을 위해 분야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분야별 NGO 연대기구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

평화, 환경, 인권 등 분야별로 전국적 연대 기구를 갖고 있는 것은 한국 NGO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NGO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 NGO들이 전국적 연대를 통해 역동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 차원에서의 NGO 활동은 활발해도 지역이나 부문을 넘어서서 연대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역, 부문 사이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이를 넘나드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런 단체들에 대해 부정적 정서들이 존재한다. 반면에 한국 시민운동은 그 뿌리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잇닿아 있기 때문에 지역, 부문을 넘어서는 전국적 연대에 매우 익숙하다.

한국의 부문별 NGO 연대기구들은 일상적으로는 회원단체들 사이의 정보 소통 및 회원단체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업적으로는 개별 회원 단체를 넘어서는 전국적 사안이나 중요한 의제들에 대한 공동행동을 조직한다. 하지만 부문별 NGO 연대기구들은 대부분 상근 활동가를 갖고 있지 못하고, 회원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사무국 단체를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이 크지 않다. 개별 단체 입장에서 기존의 단체 사업 이외에 추가로 연대기구의 사무국을 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 사업은 부문별 연대기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개별 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

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부문에 있는 NGO들 사이에서도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일도 발생한다. 또한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공동 기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실무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인데, 그렇지 않아서 비슷한 국제행사가 중복되어서 개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국제행사를 개별 단체의 역량으로 개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무적으로 몇 개월간 준비하는 것도 개별 단체 차원에서는 벅찰 뿐더러, 재정 마련을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별 단체의 주도성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국제행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기껏 해서 2~3차례 개최되거나 아니면 길어도 5회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연대기구가 주최하는 동북아 교류협력 사업을 중심에 배치하고, 이와 병행하거나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별 단체들의 국제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개별 단체들이 국제협력 사업을 해야 하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되고, 개별 단체들의 국제협력 사업은 단체의 정체성을 반영한 보다 특화된 사업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상설화 지원

NGO들이 활동하는 공간적인 범주를 기준으로 NGO를 분류할 경우, 우선 활동지역이 한 국가 내에 한정되어 있는 NGO와 국경을 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NGO로의 구분이 가능하며, 전자를 국내 NGO(national NGO)라고 부르고 후자를 국제 NGO(international NGO)라고 칭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NGO는 또 다시 세계 전 지역을 활동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는 전 지구적 NGO(global NGO)와 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일부 지역을 단위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 NGO(regional NGO)로 분류될 수 있다.⁸⁴

이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NGO의 국제교류를 초국적 NGO 차원과 국제 NGO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국제 NGO(international NGO)는 여러 나라에 자신의 지부를 두고 국가 간의 관계를 단위로 활동하는 단체이고, 초국적 NGO(transnational NGO)는 자신의 지역사회 내지는 이슈에 기

84_박재영, 『국제관계와 NGO』 (서울: 법문사, 2003), p. 13.

반을 두고 활동하면서도 필요한 사안에 따라 외국의 NGO와 교류하거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NGO인 것이다.⁸⁵

이러한 구분에 기초해서 볼 때 한국 NGO들은 거의 초국적 NGO이고, 국제 NGO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현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NGO는 20여개인데,⁸⁶ 이러한 단체들의 대부분이 국내 활동에 중심을 두면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물론 유엔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국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평화, 환경, 인권 분야의 NGO들 중에는 국제 NGO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다. 반면에 개발 NGO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국제 NGO들이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평화, 환경, 인권 분야에서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북아의 지역 NGO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으며, 그렇다고 한국 NGO가 발전해서 중국과 일본에 지부를 두는 형태의 국제 NGO로 발전하기도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중·일 내에서 동북아의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외국 NGO들의 지부 형태로 국내 활동을 하는 NGO들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지역 NGO(regional NGO)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조건에서, 동북아에서의 NGO 활동은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평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하지만 현재의 동북아 NGO 네트워크는 비상설적으로 운영되면서 일회적인 교류나 정보 교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네트워크의 상설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서 상설화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사무실과 인력이 존재하는 것을

85_ 박재창, 『지구시민사회와 한국 NGO』 (서울: 오름, 2006), p. 23.

86_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 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 NGO는 2007년 8월 현재 총 23개이다. 그중 포괄적 협의지위 NGO는 굿네이버스 하나이고, 특별 협의지위 NGO는 경실련, 굿피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밝은사회 국제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여성회,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뇌과학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한국환경운동연합, 한민족복지재단, 환경정의시민연대, 한국JTS이며, 명부상 협의지위 NGO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있다.

말한다. 지금까지의 네트워크는 회원단체 중의 하나가 비상시적 업무로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해 왔다면, 자체의 사무실과 인력을 갖는다는 것은 네트워크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정부 차원에서 공동의 (가칭) ‘동북아시민사회교류기금’을 조성해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설립과 운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아직 동북아에서의 NGO 교류협력에 대해서 소극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 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V. 결론

동북아에서 지역적 차원의 NGO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지역 차원의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그에 기초해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동북아라는 지역 차원의 NGO 교류협력 인프라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NGO 교류협력 인프라를 다양한 기준에서 나눌 수 있지만, NGO들이 국제교류에 나설 때 가장 일차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사람과 재정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NGO 교류협력 인프라를 인적 인프라와 재정적 인프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북아 NGO 교류협력을 용이하게 해 주는 법률, 규칙, 기구에 대한 것으로 제도적 인프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인적 인프라, 재정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인적 인프라의 경우, NGO들 사이에 양자 간 혹은 다자간의 관계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이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의 9·11 테러와 동북아 역사문제 등으로 동아시아에서의 NGO간 협력은 질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초보단계일지라도 양적인 측면과 이슈영역에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교류가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와 재정적 인프라가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적 인프라에 비하여 아직 재정적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적 인프라에 관한 현황을 종합해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정부 출연의 연구단체 및 재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긍정적인 요소들은 재정마련을 시민사회가 스스로 하려고 발벗고 나섰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에 의존하는 형태의 재정지원이 아니라 시민단체 배경의 자립형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아름다운 재단, 환경재단, 여성재단, 인권재단이 그러하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최근에는 이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재단들

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와 특정한 분야의 NGO를 지원하는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인프라의 경우, 대체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늘고 있는데 반하여 아직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학에서 동아시아 학생들을 입학시킬 경우,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보다는 국내취업을 위한 위장유학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이들 간의 교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제도만 탓할 수는 없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동아시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정부, 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NGO가 함께 구축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험적인 형태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동북아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은 유용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사회의 책임의식이 강조되면서 동아시아 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원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며 함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감된 비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북아 교류와 협력은 단순히 재정 및 제도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가치와 방향성에 관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상황에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동북아 지역체제의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선 동북아에서 NGO 네트워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동북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체제의 형성이 더디다는 것이다. NGO들이 관심을 갖는 의제들도 개별 국가 차원, 동북아 지역 차원, 지구적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으로 바로 연결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동북아 지역 차원이 바로 의제와 활동의 양 영역 모두에서 개별 국가 차원과 지구적 차원을 원활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체제의 형성을 전망하는 것 속에서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발전을 위한 한국의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보다는 공동안보체제 형성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주변 국가의 협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동북아 지역질서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른 측면에선 동북아 시민사회의 발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재 한·중·일의 시민사회 발전 정도나 내부 역량, 동북아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이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입장에서 한국이 해계모니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북아의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셋째, NGO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 행사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NGO 교류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동북아 NGO 네트워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네트워크가 나름대로 재정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체제가 형성되어서 동북아 공동기구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때일 것이다. 결국 동북아 NGO 네트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개별 국가의 정부나 재단,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재단, 기업의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속에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별 동북아 지역체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체제가 발전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분야별로도 그 발전 정도가 상이하다. 또한 각 분야의 지역체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된 적이 없다. 동북아에서는 정부와 NGO 모두 지역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야별 동북아 지역체제의 전망과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체제 형성을 위한 민관협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 측 기구들은 그동안 NGO들과의 협력을 주로 국내 문제에 한정해서 대화를

해왔고,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선호해왔다. 정부는 아직 NGO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등을 통해 간접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제협력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따로 있고, 모든 부분에서 정부가 주도성을 갖고 전면에서 나설려고 하면 민관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이제는 각 분야별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지역체제 형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분야를 넘어서서 평화, 환경, 인권 분야를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체제 형성을 위해 분야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분야별 NGO 연대기구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행사를 개별 단체의 역량으로 개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무적으로 몇 개월간 준비하는 것도 개별 단체 차원에서는 벅찰 뿐더러, 재정 마련을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별 단체의 주도성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국제행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기껏 해서 2~3차례 개최되거나 아니면 길어도 5회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연대기구가 주최하는 동북아 교류협력 사업을 중심에 배치하고, 이와 병행하거나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별 단체들의 국제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개별 단체들이 국제협력 사업을 해야 하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되고, 개별 단체들의 국제협력 사업은 단체의 정체성을 반영한 보다 특화된 사업으로 전개될 것이다.

넷째,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상설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북아의 지역 NGO(regional NGO)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조건에서, 동북아에서의 NGO 활동은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평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하지만 현재의 동북아 NGO 네트워크는 비상설적으로 운영되면서 일회적인 교류나 정보 교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네트워크의 상설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권혁태·이남주 외 공편. 『아시아의 시민사회 2』. 서울: 아르케, 2005.
- 김기봉.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2006.
- 김문조·핫토리 타미오 공편.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의 변용: 시민, 시민운동, 환경』. 서울: 아연출판부, 2006.
- 김영래 외. 『NGO와 한국정치』. 서울: 아르케, 2004.
- 나카무라 사토루 편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옮김.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서울: 에디터, 2006.
- 박영규·김수암.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박재영. 『국제관계와 NGO』. 서울: 법문사, 2003.
- 박재창. 『지구시민사회와 한국 NGO』. 서울: 오름, 2006.
- 배정호 외.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서울: 창비, 2005.
-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서울: 삼인, 2002.
- 손호철 외. 『세계화, 정보화, 남북한』. 서울: 이매진, 2007.
- 쑤커 지음. 김월희 외 옮김.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서울: 창비, 2003.
- 시민사회포럼.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아르케, 2002.
- 양문수 외.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원덕 옮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신지역주의 선언』. 서울: 일조각, 2004.
- 우카이 사토시·천광성 공편. 연구공간 수유너머 번역팀 역. 『반일과 동아시아』. 서울: 소명출판, 2005.
- 운동본부 편.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와 역사왜곡』.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유철중.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서울: 삼우사, 2006.

이기호·양미강·임성모 『동북아 사회문화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발전 방안과 모델: 평화, 역사, 지식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이남주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서울: 폴리테이아, 2007.

이숙중 편 『작은 정부와 일본 시민사회의 발흥』.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4.

이신형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서울: 민음사, 1997.

조효재 외 『한국, 아시아의 시민사회를 말하다』. 서울: 아르케, 2005.

차명제 외 『아시아의 시민사회』. 서울: 아르케, 2004.

_____. 『NG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2002.

최영중·배궁찬 외 공편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서울: 한양대 출판부, 2005.

최의철·홍관희·김수암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서울: 통일연구원, 2005.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2003.

アマルティア・セン・東郷エリカ譯 『人間の安全保障』. 東京: 集英社新書, 2006.

岡本三夫・横山正樹 『平和學のアジェンダ』. 東京: 法律文化社, 2005.

藤原修・岡本三夫編 『いま平和とは何か』. 東京: 法律文化社, 2004.

西川潤・蕭新煌編 『東アジアの市民社會と民主化』. 東京: 明石書店, 2007.

世界編集部 『世界: 歴史教科書問題: 未來への回答』. 2001年 12月号 別冊.

世界編集部 『世界: 北朝鮮核實驗以後の東アジア』. 2007年 4月号 別冊.

川崎哲 『核擴散: 軍縮の風は起こせるか』. 東京: 岩波新書, 2003.

坂本義和 『世界秩序と市民社會』. 東京: 岩波書店, 2005.

2. 논문

강상중.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북일관계.” 『창작과 비평』. 가을호, 2003.

권 올 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김기정·이서향·최강.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추진방안.” 『동북아시아대
위원 연구용역 보고서』, 2005.

- 김병로. “동북아 인권 NGO의 실태와 협력 동향.” 『동북아 NGO 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성보.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의 첫 걸음 - 『미래를 여는 역사』의 집필과정과 한국의 반응.” 『세계』. 10월호, 2006.
- _____.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의 첫 걸음 - 『미래를 여는 역사』의 집필과정과 한국의 반응.” 일본 동경경제대학 심포지엄 발표문, 2006.
- 라미경. “아시아지역을 위한 공적개발 원조와 개발 NGO.” 『민주주의 발전과 NGO의 역할』. 한국 NGO 학회 춘계 발표논문 자료집, 2007.
- 리장평. “NGO문제에 관한 몇 가지 연구와 토론.” 『5.18광주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6.
- 박명희. “일본의 NGO활동과 국제협력 - 개발 NGO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순성·이기호. “한반도평화와 동북아시아 시민연대.” 아시아의 새질서와 연대의 모색: APEC 2005 국제심포지움, 2005.
- 박용석. “정부지원을 통한 비정부조직(NGO)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박윤철. “중국 개혁개방 후 국가와 사회의 재구조화: 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88호, 2000.
- 배진수·강성호·김영경.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동북아 지역 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사회 문화 변동: 전통사회의 해체와 시민사회의 등장.” 『동아연구』, 2004.
- 사카모토 요시카즈. “세계시장화에 대한 대항구상: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시민국가.” 『한림일본학연구』. 제3집, 1998.
- 손호철. “세계화와 민족국가의 향방.” 손호철 편. 『근대와 탈근대의 정치학』. 서울: 문화과학사, 2002.
- 아시아역사연대. “역사대화의 경험공유와 동아시아 협력모델 찾기.”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6.
- _____. “한·중·일 3국간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심층보고 - 『미래를 여는 역사』 백서,” 2005.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5년 활동보고서,” 2006.
- 양미강. “2005년 한국교과서운동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 2005년 일본 후소사 교과서 불채택운동 평가 심포지엄자료집, 2005.
- 王名. “중국 환경 NGO의 어드보커시 활동에 관한 한 사례 연구: 노강 문제를 사례로.” 동아시아 평화포럼 2006 자료집, 2006
- 이기호.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사회운동네트워크: 1987~1996.”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
- _____. “동아시아 활동연대 체험기.” 서남포럼. 『2006 동아시아 연대 운동단체 백서』. 서울: 아르케, 2006.
- 이명식. “韓·日 非營利團體에 관한 比較研究-制度的·運營의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상정. “NPO(비영리조직)의 活性化 方案.” 『경희법학』. 제36권 1호, 2001.
- 정주영. “중국의 새로운 국가-사회관계: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시민사회와 NGO』. 제2권 제2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 채원호. “일본의 낙선운동연구.” 『NGO 연구』. 제4권 제1호, 2006.
- 최대석·이종무·김석항·김경묵. “동북아 NGO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파악 및 발전의제 설정.” 『동북아 지역 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평화포럼. “활동가들이 나누는 한국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2006 한국평화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2006.
- Andrew F. Cooper·John English·Ramesh Thakur, el., “Enhancing global governance: Towards a new diplomacy?” Tokyo·New York·Pari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2.
- Guangyao Chen. “Chin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tatus, Government Policies, and Prospects for Further Development,” 2000.
- Hall, Peter.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Jia Xijin·Wang Ming. “Civil Society and in China.” International Symposium in Waseda University, November 21st 2003.
- Kinhide Mushakoji. “The ‘Right to in Peace’ and ‘Human Security.’”

- UNU-KNCU Global Seminar Jeju Session, 2005.
- Ming Wang. "The Development of NGOs in China." *The Nonprofit Review*, Vol. 1. No. 1, 2000.
- Qiusha Ma. "Classification, Regulation, and Managerial Structure: A Preliminary Enquiry on NGO Governance in China." Oberlin College. World Bank, 2002.
- Silk, Thomas. "Philanthropy and law in Asia," 1999.
- 吉田忠彦. "NPO中間支援組織の類型と課題." 『經營學論集』. Vol. 44. No. 2, 2005
- 岩田陽子. "NPO税制の概要と課題." 『レファレンス』. Vol. 54. No. 5, 2005.

3. 기타

- 제2차 한·일 시민사회 포럼 자료집 2004.
- 제3차 한·일 시민사회 포럼 자료집 2005.
- 제4차 한·일 시민사회 포럼 자료집 2006.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외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혜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응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 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의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근, 박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망: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월간 북한동향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 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